

## 6. 2.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 사회복지 정책의제 제안집

6.2 지방선거 경기도사회복지대책위원회

## 6. 2.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 사회복지 정책의제 제안집

참여기관 :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경기도노인복지시설연합회, 경기도보육시설연합회,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 경기도노숙인시설연합회, 경기도아동복지협회,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경기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협의회, 경기복지시민연대, 한국지역자활센터 경기지부, 한국정신장애인사회복귀시설협회 경기지부

# 경과보고

6.2 지방선거

경기도사회복지대책위원회

## □ 경 과 보 고

- 지난 3월25일 6.2. 지방선거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사회복지정책 공약화를 위한 도내 유관단체장 회의를 개최하고 사전 사회복지 전반과 각 영역에서 실천 가능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자는 의견을 교환하고 (가칭)6.2. 지방선거 대비 경기도사회복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라 한다.)를 구성하기로 결의함.
  - 6.2. 지방선거 경기도사회복지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원칙적 합의와 대책위가 소속한 중간관리자급 중심의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결의하였으며
  - 6.2. 지방선거 기간 동안 사용할 캐치프레이즈로 “도민의 기본권리 복지권은 우리손으로!! 라는 공식 캐치프레이를 선정함.
  - 또한 참여단체를 중심으로 한 분야별 주요 의제 및 공통의제를 선정하기로 하였으며 더 나아가 후보자 초청 사회복지정책토론회 개최 등을 결의하였음.
  - 대책위 제반진행 및 행정사항 추진관련(사회복지협의회 위임처리)
  
- 이에 사전 대책위 소속 기관의 실무위원을 추천·위촉하여 지난 3월31일 제1차 6.2. 지방선거 경기도사회복지대책 실무위원회의를 개최하여
  - 정책토론회 추진 상황설명과 더불어 향후 추진계획을 공유하였고
  - 각 분야별 정책 의제 작성을 결의하였으며 다양한 의견수렴과 대책위원회 운영을 위한 각 단체별 토론회 활동 경비를 각출하기로 하였음.
  
- 4월13일 제2차 6.2. 지방선거 경기도사회복지대책 실무위원회의를 개최하여
  - 분야별 사회복지정책의제 작성을 독려하고 향후 추진일정과 공통의제를 공유함.
  - 각 분야별 정책 의제 작성을 독려하였으며, 대책위원회 활동과 의제에 대한 자문을 위한 자문교수(한신대학교 이인재, 경기대학교 김형모)를 선정 함.
  
- 4월14일 각 방송사 및 언론사 협의
  - 잠정 5월 17~19일 정책토론회 개최를 합의 하였으며, 공동주관기관으로 경기방송과 경기일보가 선정됨.
  
- 4월23일 제3차 6.2. 지방선거 경기도사회복지대책 실무위원회의를 개최하여
  - 정책토론회 추진 상황설명과 더불어 1차 취합된 분야별 사회복지 정책의제 설

명과 검토·논의에 따라 보완하도록 함.

○ 4월28일 제4차 동 실무위원회의를 개최하여

- 동안에 보완된 분야별 정책 의제 설명과 2차보완 및 수정작업을 하였음.
- 미흡한 의제에 대한 자문교수의 자문을 통하여 의제 수정을 5월4일까지 최종 제출을 요청하고 대책위원회를 당초 4월30일에서 5월 6일로 변경 개최하기로 함.
- 현재 민주당 등 야권연대가 실시되지 않아 후보자들의 전체 일정 파악이 어려워 추후 확정되면 최종 일정을 확인하기로 함.

○ 5월 6일 제1차 대책위원회의를 개최하여

- 동안 제출된 의제 설명 및 최종 수정안 보고함.
- 1번 공통의제 및 분야별 의제 수정 보완 논의

○ 5월 10일 실무위원회 T/F팀 회의 개최

- 1번 공통의제(복지예산 확충) 수정 및 보완
- 향후 일정 논의

○ 5월 13일 각 후보자 진영 방문 및 공동주관 기관과 협의

- 각 후보진영에 방문하여 토론회 참석요청
- 경기방송 및 경기일보 토론회 추진관련 담당자 협의

○ 5월 17일 제2차 대책위원회의를 개최하여

- 토론회 취소에 따른 대안모색(서면답변 등)
- 향후 일정 논의

○ 5월 18일 대책위의 사회복지 정책의제 각 정당 후보진영 전달 및 같은달 24일 후보자별 서면답변 확보

- 5월 25일 대책위 참여단체별 서면답변 홍보 및 경기사회복지신문에 홍보·발행

# 목 차

▷ 후보자별 답변서

▷ 사회복지 정책제안

**【 5대 공통의제】**

도민의 복지권리 복지예산 확충

사회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및 효율적인 전달체계 개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한 사회복지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분야별 의제】**

▷ 6.2 지방선거 대비 경기도사회복지대책위원회 명단

▷ 6.2 지방선거 대비 경기도사회복지대책위원회 실무위원 명단

# 경기도지사 후보자 서면답변

한나라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 각 정당 경기도지사 후보자별 정책제안 서면답변 내용

“도민의 기본권리 복지권은 우리손으로..”

## 【 공통의제 】

### 도민의 복지권리 복지예산 확충

김문수 후보

현 황

년 경기도 예산 조 억원 중 복지예산은 조 억원으로서 전체 예산 대비 전국 시도 복지예산 비율은

문제점

보육시설지원 기초노령연금 기초수급자 지원 의료급여 지급 등에 과도한 예산 투자

국비사업 지방분권교부세 사업 전환 후 지방비 부담의 기하급수적 증가

대 책

향후 복지예산을 조원 이상 으로 확대 현재 수준에서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조 천억원 정도의 추가재원 투입 필요

년 당초예산 편성시의 가용재원 천억원 감안 년동안 정도 확대목표 설정 필요

지속적인 복지예산 확충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경기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시 적극 반영

심상정 후보

현재 경기도의 사회복지 예산은 전체 예산의 년 제 차 추경 일 반예산 기준 정도로 광역시와 도의 세입 및 세출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서울시의 복지 예산인 보다도 낮은 상태임 게다가 경기도는 서울시보다 저소득층 장애인 청소년 등 복지 대상자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경기도의 복지 예산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제가 도지사로 선출된다면 경기도 예산 전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한 후 사회복지 부분의 예산을 합리적으로 단계적으로 증가시키는 방안을 강구 하겠음



임기 내 경기도 복지 예산을      까지 늘려달라는 경기도사회복지대책위원회의 주장은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함 남은 문제는 경기도 전체 예산 중 복지 예산 비율      를 어떻게 높여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인데 이 문제는 도정의 우선 순위를 무엇에 둘 것인가 개발이나 복지냐에 대한 철학적인 인식과 복지를 선거 때 당선을 위한 장식으로 생각하느냐 진심으로 그것을 최우선 순위로 수행하고자 하느냐의 정책적 의지의 문제임

경기도 한해 예산      조여 원 중 낭비성 사업을 재검토하고 입찰방식 개선으로 과도한 건설예산을 줄이며 공유재산 임대수익 증대 이자수입 증대 물건비 절감 체납 세금 관리 등을 통해 조      억원 가량의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일반사회복지 및 보육·보건의료·주거 등 복지 분야에 집중 투자할 것임 이 외에도 일반사회복지분야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위한 기금관련 조례제정은 임기가 시작된 후 곧바로 검토할 것이며 임기 내 반드시 실현할 것임

#### 유시민 후보

년 경기도의 복지 예산 비중은 도 예산의 약      임 민선 기 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도 사실임 하지만      년 지방재정평가에 따르면 경기도민 인당 사회보장지원금은 만 천원으로 전국 꼴찌일 뿐 아니라 전국 평균인 만 천원의      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나아가 실제 도지사의 정책 의지를 가장 잘 반영하는 가용재원 중 복지 예산 비중은      년      년

임 민선 기 복지 도정은 복지 확대라 해도 과언이 아님 제가 도지사가 되면 복지정책을 충실히 운영하기 위한 복지 예산을 경기도사회복지대책위원회가 기대하는      를 넘어      까지 확충할 것임

이제 복지정책은 취약계층에 대한 단순 지원을 넘어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심화를 막는 사회적 투자임 나아가 시혜적 복지를 넘어 보편적 복지 시대로 접어들면서 도민 누구나 요구하는 교육복지 안전복지 수준이 높아지고 있음 토목과 개발사업 대신 이러한 사람에 대한 투자를 높이려면 복지 예산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함

예산 확보와 아울러 경기복지의 방향을 담은 경기복지발전      개년 계획을 마련할 계획임 예산 확보는 단계적으로 하되 이 과정에서 경기도 예산 전체를 근본적으로 검토 구조조정하는 동시에 경제 활성화로 세수 기반을 넓히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것임

## 사회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및 효율적인 전달체계 개선

김문수 후보

현 황

일부 복지분야 인프라 부족

무한돌봄센터 경기도 내 개 시군에서 운영

문제점

예산 투입 대비 복지체감도가 낮고 복지의 중복 및 사각지대 존재함

또한 복지서비스의 부처별 유형별 서비스 종류가 과다함

대 책

시각장애인복지관 취약계층 일자리 관련 시설 등 확충

무한돌봄센터를 도내 개 시군 전체에 설치하여 기초자치단체간 복지재정

격차를 해소하고 사례관리를 통하여 효율적 통합적인 복지서비스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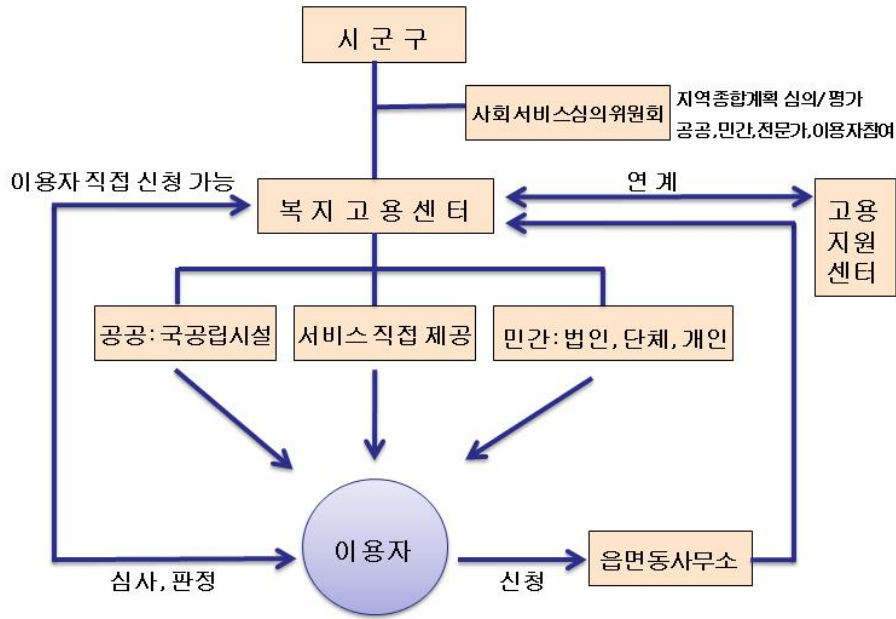
민간복지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관계 증진

심상정 후보

지적하신 대로 현재 지역복지전달체계의 개선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통합된 전달체계로 개편해야 함

우선 경기도 정무부지사를 복지부지사로 바꾸겠음 복지가 경기도의 일부 기능이 아니라 경기도 기능 자체가 행정 중심에서 복지 중심으로 확 바뀌어야 함 복지부지사는 경기도의 복지정책을 총괄하며 부서별로 흩어져 진행되고 있는 각 복지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집행 복지부지사 제도 신설과 함께 복지정책을 집행하는 각 부서별 보건 복지 여성 주거 고용 교육 등 연계 시스템도 함께 구축하겠음 현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에 의거 광역 시 도 및 특별자치도의 정무부시장 정무부지사는 시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부시장 행정부지사의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명칭 역시 조례로 정할 수 있음

시군구마다 복지고용센터를 만들어 지역 사회서비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르는 적정 인력을 양성하여 정규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겠음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지역 사회 상황에 맞게 배분함으로써 전달체계의 효율적 개선 문제에 답할 수 있을 것임



### 유시민 후보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인프라는 도 농간 남북간 편중 기존 시설간의 서비스 중복과 역할 혼선 기관 간 네트워킹 및 정보 공유 단절 등이 대표적인 문제로 파악됨

복지 혜택은 공평해야 함 따라서 도지사가 되면 지역적 편중 문제는 반드시 조정하겠음 기존 시설들의 서비스 중복과 역할 혼선 문제 또한 모든 서비스는 수요자의 요구에 맞춰져야 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 최적의 활동을 위한 구조로 개편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이 과정에서 기관 간 네트워킹과 정보 공유를 통해 수요자의 중복 수혜문제 효율적 운영 등을 꾀하겠음

복지 분야에서 개별적 정책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 한정된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고 생각함 복지전달체계를 강조하는 이유 또한 이를 위한 시스템이기 때문임

그럼에도 민선 4기 복지 도정은 재단 중심의 무한돌봄센터 운영이라는 욕망 혹은 중 체계로 인해 중복 지원과 현장 혼란 평가 부재 등의 문제를 노정하고 있음

제가 도지사가 되면 도 시 군 읍 면 동에 이르는 행정체계상 비교적 고루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그동안 공공복지 영역의 공백을 상당히 메워온 민간 복지기관 및 조직들과 네트워킹과 파트너십을 맺는 민 관 협력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달체계 경기휴먼서비스센터를 구축해 복지전달체계의 문제를 해결하려 함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김문수 후보

현 황

일반공무원과 비교시 생활시설은                      수준    이용시설은                      수준  
문제점

직위 및 호봉간 격차로 높은 이직율을 보임

후생복지 열악 퇴직 후 불안감 상존

대 책

  역원 지원하여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설립 추진 향후 도 시군    역원  
  이상 추가지원 필요                      이상 급여인상효과 및 안정감 부여  
  사회복지 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관련 보건복지부 지침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임금가이드라인 상향조정

심상정 후보

  복지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  
  우개선과 업무 집행에 있어서 권한 부여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제가 도지사가 되면 이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임 현재 사회복지 종  
  사자의 임금 수준은 공공 및 사회복지부문 전 산업 종사자 평균임금 대비

  로 아주 열악함 이 정도의 임금 수준으로는 사회복지 종사자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도 없으며 높은 노동강도와 열악한 임금 수준 때문에 잦은 이  
  직을 유발해 숙련된 양질의 노동력 역시 확보될 수 없음 따라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임금은 앞으로 지속적인 상승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  
  로는 공무원의 임금 수준으로까지 상향조정되어야 한다고 봄

  우선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들이 다수 참여하는 정책실무팀을 구성해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음 여기에서 필요하다면 사회복지종사  
  자 처우 개선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례 를 제정하겠음

  이 밖에도 진보신당에서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을 준비  
  중에 있음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기본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을 보더라도 혹  
  은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을 보더라도 사회복지 현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지위나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은 거의 부재함 따라서 사  
  회복지종사자들의 지위와 처우개선에 대한 기본 가이드라인을 정할 수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을 만드는 중에 있음

## 유시민 후보

그 동안 도민의 전반적인 복지욕구가 높아지는데다 중앙정부의 각종 복지정책이 지방정부로 이관되면서 복지 업무 종사자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을 잘 알고 있음 특히 인구 유입이 많은데다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의 지리적 특성 때문에 업무 하중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 그럼에도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은 전적으로 종사자 여러분들이 따뜻한 사명감을 가지고 열성적으로 활동하는 덕분이라고 생각함

반면 사회복지종사자들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수당조차 받지 못하는 열악한 여건 속에서 일하는 현실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해 종사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그에 따른 잦은 이직 등으로 복지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악순환이 연장되고 있음

최고의 복지정책은 휴먼서비스로 완성된다는 것을 알기에 사회복지종사자분들이 복지정책의 기둥이라고 생각함 복지 예산을 확대하고 경기복지발전 개년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반드시 종사자 여러분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체계적인 교육 훈련을 통한 사회복지종사자 전문성 강화

김문수 후보

현 황

사회복지사의 본임부담 연간 보수교육 실시      년 최초 실시

소속기관의 실무교육 실시

문제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용의 자기부담에 부담

사회복지 변화에 대한 사회교육 체계 부족

대 책

사회복지사 사기 진작을 위해 보수교육비용 예산지원 증액

경기복지재단을 통한 사회복지사 전문교육 상설화

해외연수 등 기회교육 강화

심상정 후보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복지종사자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최종 전달됨 특히 사회복지서비스는 일반 재화와 다르게 인간 대 인간의 만남을 전제로 한 대인 서비스임 따라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지식과 능력이 서비스의 질을 좌우할 수 밖에 없음 사회복지종사자의 질적 수준 향상은 곧바로 복지서비스의 향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어서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체계적인 교육 훈련이 무엇보다 중요함

그러나 현재 경기도내 사회복지 종사자는 약 만명에 달하나 교육 예산의 부족 등의 이유로 약 년에 번 정도 교육을 받는 것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게다가 경기도 지역 내 사회복지사들 상당수가 자부담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있음

따라서 경기도 사회복지종사자가 양질의 교육을 통해 지속적인 전문성 강화를 꾀할 수 있도록 인력 양성 과정 보수교육 포함 전반에 대한 체계적 연구 및 실현 방안을 마련하겠음 이를 위해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전문성 강화 대책을 수립하고 다각도의 검토를 통해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례도 제정하겠음

유시민 후보

사회복지서비스는 종사자를 통해 전달되기에 종사자의 지식과 능력 열정이 서비스의 질을 좌우한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함 그리고 복지 수준이 높아

질수록 요구되는 서비스의 질도 높아지고 전문적일 수밖에 없기에 종사자들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은 매우 중요함

현재 경기도내 사회복지종사자 약 만 여명 가운데 실제 교육에 참여한 수는 만 천여명 중복을 고려하면 이에도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보고는 경기도 복지정책의 또 다른 문제로 파악됨

도지사가 되면 사회복지종사자 및 관련 기관 교육훈련 현황 조사 시 군 차원에서 진행되는 우수 정책 경험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직종별 체계적인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겠음

##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김문수 후보

현 황

취약계층 일자리 기관 지역자활센터 개소 노인일자리센터 개소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곰두리 공판장 개소

문제점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별로 각각 별도의 일자리 사업전개로 효율성 저하  
생산품의 판매망 부재 및 마케팅 부재로 운영에 애로

사무실 사업장 교육장의 부재 및 이원화로 사업추진에 애로

대 책

자활 노인 장애인의 통합 일자리사업장 마련

도 단위의 취약계층 전담부서 운영

교육장 종합판매 유통점 상담실 등 운영

심상정 후보

경기도를 비롯 한국 사회는 전반적으로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사회적 경  
제 을 통한 서비스는 발달하지 못함 사회서비스의 경우 사회적 경제의 공동  
체의 연대와 자발성에 따라 대단히 높은 효율성을 보이고 있으므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공동체 기금과 신설할 도립 은행 등을 통해 확  
대할 것임

사회적 경제를 향후 5년 간 도 경제의 10% 수준으로 발전시킬 목표로 사업  
을 추진할 것임

노 사 민 학 정이 참여하는 경기도 사회경제 전략대화 를 상설화하여 사회경  
제 육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것임

경기도는 중앙정부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을 풀뿌리 경제에 포함시켜 더  
포괄적인 범주로 시행할 것임

사회서비스는 단순히 정부 지원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 풀뿌리  
경제 라는 더 큰 범주의 특유의 생태계가 형성돼야 최소의 비용으로 스스로  
확대된다는 인식이 중요함

사회경제는 지역의 사회자본을 공급하고 사회통합을 촉진하므로 전체 경제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함 물질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괜찮은 일자리

창출 사회적 경제로 창출되는 일자리는 안정적 이고 사회경제는  
고용의 안정성이 시장경제에 비해 높음 정신적 만족감이 높기 때문

현재 한국의 풀뿌리 경제는 지극히 초보적인 단계이므로 초기에는 기존 정책



에 지방정부의 보조금을 지급하지만 네트워크화를 촉진하여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임

중앙정부의 사회적 기업법을 넘어서 협동조합형을 포괄하는 사회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 가칭 를 제정할 것임 현재의 자활단체 생협이나 사회적 기업 등 다양한 복지전달 체제 및 시민사회단체와 협의하여 추진할 것임

설립을 추진할 도립은행은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에 대한 대출 등 지원 경험을 축적하여 사회경제의 사회적 목표와 경제적 목표를 포괄하는 사회경제 대출기준을 마련할 것임 도 차원의 지원에서 출발하여 지역금융 공동체 기금을 통한 지원 자립의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유도할 것임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임

노동부 기준 사회적 기업 인증을 협동조합형까지 확대하여 유사한 기준 하에 연간 100개 이상의 풀뿌리 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자활사업 육성할 것임

약 100명 고용 년 예산액 현재 노동부 지원금액 인당 1만원 월 인 평균 고용인원 100개월 100개 억원

년 지원으로 자립하도록 하면 100년 총 예산 100조원으로 100만명 이상의 고용과 사회서비스 복지 확충할 것으로 예상

자립한 풀뿌리 기업 이윤의 일정액을 모아 풀뿌리공동체기금 형성 100년 후에는 경기도 풀뿌리경제가 스스로 사업을 확충하는 자립적 네트워크 형성하도록 추진

## 유시민 후보

실질 실업자 100만 명 시대 청년 졸백 졸업과 동시에 백수가 되는 현실을 표현한 대학생들의 표현 시대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사회적 대안이 절실함 이에 저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 라는 확신으로 사회서비스 부문 일자리 100만개 창출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100개 이상씩 사회적 기업 설치 운영 지원 등을 공약했음

사회서비스 영역은 신규 고용 창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영역인 동시에 국민 소득 1만 천 만 달러 시대로 진입한 사회가 필요로 하는 국민적 욕구와도 잘 부합하는 영역임 게다가 100개 가입국 가운데 우리나라는 사회서비스 영역 일자리 비율이 절반에 불과해 고용 창출 여지는 더욱 큼

나아가 이 공약은 저소득 근로능력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활사업 장애인 직업재활 어르신일자리사업 등 민간의 자발적인 사회경제적 활동으로 더욱 빠르고 의미있게 추진될 수 있음 이에 돌봄노동영역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적극 발굴 연계하는 한편 다양한 시범사업으로 경험을 축적한 다음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것임 사회적 경제 활성화는 복지 예산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차원에서도 중요하게 추진할 의제라고 생각함

※ 후보자별 답변 총괄표

※ 의제 이행 여부 ○표시 정책의제 전면수용 △표시 정책의제 부분수용 □표시 정책의제 미수용

◆ **공통의제**

의제 번호	정책의제	후보자명	의제 이행 여부	의제 이행 연도			
	공약이행사항 검토를 위한 토론회 등 연도별 개최	김문수	○				》
		심상정	○				》
		유시민	○				》
	도민의 복지권리 복지예산 확충	김문수	○				》
		심상정	○				》
		유시민	○				》
	사회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및 효율적인 전달체계 개선	김문수	○				》
		심상정	○				》
		유시민	○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김문수	○				》
		심상정	○				》
		유시민	○				》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한 사회복지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김문수	○				》
		심상정	○				》
		유시민	○				》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김문수	○				》
		심상정	○				》
		유시민	○				》

◆ 분야별 의제

분야	의제 번호	정책의제	후보자명	의제 이행 여부	의제 이행 연도			
노인		경기도 핵심사업 무한돌봄네트워크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 센터 실버인력뱅크사업 노인돌봄기본사업 등의 연속성 및 효과성 증진을 위한 담당직원 충원 및 정규직 전환	김문수	○				》
			심상정	○				》
			유시민	△				》
		경기도 내 노인복지관 시설규모 및 인력배치 최소화 기준 마련	김문수	○				》
			심상정	○				》
			유시민	△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 후 비영리법인 노인요양시설과 경기도와 관계 정립	김문수	○				》
			심상정	○				》
			유시민	△				》
		노인 위기지원 시스템 구축 노인위기지원센터 운영	김문수	○				》
			심상정	○				》
			유시민	△				》
		재가지원서비스 확대·개선방안	김문수	○				》
			심상정	○				》
			유시민	△				》
		은빛사랑채 기능강화 방안	김문수	○				》
			심상정	○				》
			유시민	△				》

장애 인	중증장애 노인을 위한 노인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확충	김문수	○				》
		심상정	○				》
		유시민	△				》
	장애아 통합보육 교육 지원센터 운영	김문수	○				》
		심상정	○				》
		유시민	○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관리감독 강화	김문수	○				》
		심상정	○				》
		유시민	○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정책적 육성	김문수	○				》
		심상정	○				》
		유시민	△				》
	장애인주·단기보호시설 운영의 현실화	김문수	○				》
		심상정	○				》
		유시민	△				》
정신장애인 탈원화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시·군·구 각 이용·입소 개소 이상 사회복지시설 확충	김문수	○				》	
	심상정	△				》	
	유시민	△				》	
전국대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확보를 위한 방안	김문수	○				》	
	심상정	△				》	
	유시민	△				》	
아 동	부적응 시설·학교·사회 아동 영역별 전문보호치료 영역 확보	김문수	○				》
		심상정	○				》
		유시민	△				》
	요보호아동의 자립지원 강화	김문수	○				》
		심상정	○				》
		유시민	△				》

아 동	지역사회아동보호 강화 아동복지시설의 다기능화를 통한	김문수	○				》
		심상정	○				》
		유시민	△				》
청 소 년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예산 증액	김문수	○				》
		심상정	○				》
		유시민	△				》
	찾아가는 청소년 동반자 사업 지역 및 인원	김문수	○				》
		심상정	○				》
		유시민	△				》
	초·중·고등학교 단계별 인성교육 및 학교폭력예방교육 실행 강화 및 학교폭력 전담 상담원 배치	김문수	△				
		심상정	○				》
		유시민	△				》
지 역 복 지	지역사회복지관 미설치지역 개 시·군에 사회복지관 설치로 지역 간 복지서비스의 불균형 해소	김문수	○				》
		심상정	○				》
		유시민	△				》
	지역사회복지관을 무한돌봄센터와 연계한 사례관리 거 점센터 지정	김문수	△				
		심상정	○				》
		유시민					
	재단으로 이관된 직능단체 보조금 경기도로 환원	김문수	○				》
		심상정	△				》
		유시민	○				》
	사회복지전문가 양성체계 구축 및 지원	김문수	○				》
		심상정	○				》
		유시민	△				》

노 숙 인	노숙인시설 인프라 확충	김문수	○				》
		심상정	○				》
		유시민	△				》
	주거복지 경기도민 노숙인 에 대한 최소한의 주거권 확보	김문수	○				》
		심상정	○				》
		유시민	△				》
	운영지원의 현실화	김문수	○				》
		심상정	○				》
		유시민	△				》
	노숙인 자활지원을 위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가 수립되어야 한다	김문수	○				》
		심상정	○				》
		유시민	△				》
자 활	자활공동체 또는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예산 확보	김문수	○				》
		심상정	△				》
		유시민	△				》
	지역자활센터 기본시설 지원	김문수	○				》
		심상정	○				》
		유시민	△				》
	지역특색에 맞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가칭 사회적일자리지원센터 설치·운영	김문수	○				》
		심상정	○				》
		유시민	△				》
	빈곤계층 자활지원을 위한 자활교육센터 설립	김문수	○				》
		심상정	○				》
		유시민					

자 활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김문수	○				》
		심상정	○				》
		유시민	○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김문수	○				》
		심상정	○				》
		유시민	△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충	김문수	○				》
		심상정	○				》
		유시민	△				》
	취약계층 근로여성을 위한 공공보육시설 확대	김문수	○				》
		심상정	○				》
		유시민	△				》
국·공립 노인요양시설 확대 및 저소득층 요양비 지원	김문수	△					
	심상정	○				》	
	유시민	△				》	
보 육	경기도 공보육 활성화를 위한 저소득층 차액보육료 지원	김문수	○				》
		심상정	△				
		유시민	○				》
	경기도내 보육시설 인허가 관련한 기준조례안 제정	김문수	△				
		심상정	○				》
		유시민	△				》
	경기도 가정보육교사제도 개선	김문수	○				》
		심상정	○				》
		유시민	○				》

시 민 연 대	근로빈곤층 생활임금 조례를 통한 경제민주주의 실현	김문수	△					
		심상정	△				》	
		유시민	△				》	
	혼선만 야기하는 지역복지 전달체계 정비	김문수	○					》
		심상정	○					》
		유시민	○					》
	사회복지인력 시설종사자 의 처우개선	김문수	○					》
		심상정	○					》
		유시민	△					》
	노인 노인통합지원서비스로 전달체계 개선 및 사회안 전망 확대	김문수	○					》
		심상정	○					》
		유시민	△					》
	노인 세대 소통과 공감 문화공간으로 경로당 개선	김문수	○					》
		심상정	○					》
		유시민	△					》
	청소년 학교사회복지서비스 활용을 통한 학교안전망 구 축	김문수	○					》
		심상정	○					》
		유시민	△					》
	청소년 지역사회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대	김문수	○					》
		심상정	○					》
		유시민	△					》
	장애인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을 통해 취업률 획기적 향 상	김문수	○					》
		심상정	○					》
		유시민	△					》



시 민 연 대	장애인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현실화와 경기도 자체시 스템 구축	김문수	△				
		심상정	○				》
		유시민	△				》
	아동 위 스타트 마을과 드림스타 트 센터의 통합관리	김문수	△				
		심상정	○				》
		유시민	○				》
	아동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대한 질적 제고	김문수	○				》
		심상정	○				》
		유시민	△				》
	아동 아동양육시설의 기능전환	김문수	○				》
		심상정	○				》
		유시민	△				》
	아동 아동복지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활성화	김문수	○				》
		심상정	○				》
		유시민	△				》

## 6.2 경기도사회복지대책위원회

# 사회복지정책 제안내용

도민의 복지권리 복지예산 확충

사회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및 효율적인 전달체계 개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한 사회복지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 1. 도민의 복지권리 복지예산 35% 확충

## 필요성

노인인구의 증가 및 출산율의 저하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증가 등 사회적 환경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한편 사회적 양극화 신 빈곤층의 발생 및 증가 등은 여전히 빈곤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말해준다 또한 주민의 복지욕구는 과거에 비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의 일차적 책임은 국가 및 지방정부에 있다 그리고 복지제도가 충실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예산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복지예산은 바로 경기도 복지정책의 충실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하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예산은 주민의 삶의 증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데서 더욱 중요하다

## 현황 및 문제점

지난 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복지인들이 사회복지예산 확충을 제안하여 현재 로 증가한 결과에 대해서는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년이 경과한 후 여전히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사회적 변화로 인하여 사회복지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향후 년을 계획하면서 경기도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전국 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으며 인당 지방세 부담액도 제주 다음으로 높다 반면 사회복지 예산비율 역시 전국 개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위로 하위 수준을 보이고 있어서 상당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년 광역자치단체 재정예산지표 비교

순위	재정자립도	1인당 지방세부담액(천원)	사회복지 예산비중(%)
1	<b>경기(59.3)</b>	제주(841)	전북(29.3)
2	경남(34.2)	<b>경기(519)</b>	경북(25.4)
3	제주(25.7)	경남(504)	충북(24.1)
4	충북(25.1)	강원(417)	경남(23.7)
5	충남(24)	충북(390)	전남(23.3)
6	경북(21.7)	충남(385)	<b>경기(23.0)</b>
7	강원(20.8)	경북(348)	충남(22.7)
8	전북(17.3)	전북(317)	강원(19.8)
9	전남(11.5)	전남(275)	제주(14.0)

자료: 행정자치부 재정고(<http://lofin.mogaha.go.kr>)

## 대안제시

현재 복지예산 비중      에서 매년      년간      예산증액 요구  
이에 대한 제 기 경기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시      적극 반영

## II. 효율적인 복지전달체계 개선 및 사회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 필요성

우리나라는 2008년 외환위기 이후 사회복지의 급속한 성장을 가져왔다 상대적 복지의 성장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이 증가하였고 그에 따라 도민들의 복지욕구도 다양화되고 질적 담보를 통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기대치가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인식의 지평이 넓어짐에 따라 복지를 바라보는 시각도 변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경기도의 환경과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미래위험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예방적 복지강화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한 노력은 국가 및 지방정부의 일차적 책임성과 더불어 민간부분의 참여와 역할에 대해서도 그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나 경기도의 경우는 한강을 기준으로 한 한수이남과 이북간의 지역적 격차는 물론 12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른 복지격차 심화 지역간 불균형 등 해소를 위한 자구 노력이 요구되며 기존 인프라의 역할 중복에 따른 혼선과 역할분담문제 예산낭비 등을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

### 현황 및 문제점

경기도는 지금까지 노인복지 아동복지 보육 청소년 장애인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전달체계 및 경기도 특화사업 자체사업 등을 창출해 오고 있으나 복지부로부터 시행을 위임받은 사업과의 차별성 내지는 중복성 초래 등 복잡다단한 서비스에 대한 혼선만 가중시킨다는 우려의 시각과 예산낭비로 인해 적재적소에 필요한 지역복지 인프라의 경우 우선 순위에 밀리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예를들자면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위스타트와 드림스타트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생활도우미와 활동보조서비스 사업이 있다

특히 노인 일자리 사업의 경우는 대한노인회를 중심으로 하는 노인취업지원센터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경강지부가 있으며 경기도 중심의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및 시 군실버인력뱅크 노인종합복지관의 노인일자리사업 시니어클럽 노인을 포함한 전체 일자리지원을 목표로 하는 경기도일자리지원센터 등 중복 또는 혼선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는 사례관리 중심의 특화된 무한돌봄센터라는 전달체계

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역사회복지관 등 기존 인프라와  
 의 역할중복 및 역할 분담문제가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는 지역복지 노인복지 및 보육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청소년  
 등의 새로운 사업을 만들고 추진함에 있어서 새로운 전달체계를 계속 만  
 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시각과 발전방향에 맞게 기존의 사업 및  
 전달체계들의 통폐합을 통해 효율성을 담보하고 효과적인 서비스들은 지속  
 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공백이 발생하는 부족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지역 불  
 균형을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아울러 경기도는 도 농 복합 형태로 지역 편차가 매우 커서 사회복지 인프라  
 가 많은 부천은 개소 성남 개소 고양 수원 안산이 개소이며 양주  
 의 경우는 전무한 상태이고 그 외 가평 김포 광주 여주 하남 등도 열악한  
 상황이다 사회복지 기관이 많은 수원 성남 안양 등도 인구수에 비하면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복지재정의 수준이나 시설분포 복지급여 수준에 있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복지 격차의 결정적인 이유인 만큼 경기도에  
 서 지역간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

표       년   월 현재 경기도 이용기관 현황



양주는 이용시설이 전무함 아동복지관이 부천에 개소 있음

### 대안제시

**중복지원 및 혼선을 야기하는 지역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민간복지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관계를 증진**

현재 지역복지전달체계의 개선을 통해 중복지원의 방지와 민간복지자원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한 효율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민간복지기관들의 역할과 기능 조정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통합된 전달체계 개편이 시급하다

**최소의 시 군별 분야별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이용기관 확충**

- 사회복지관의 경우 전 생애주기 및 다각적 방면으로 클라이언트의 복합적인 욕구에 대응하여 지역 내 풍부한 인적 물적 자원을 연계하고 총체적이며 체계적 서비스 지원이 가능해 대상자 문제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서비스 제공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문제 해결이 용이함 특히 사회복지이용시설이 하나도 없는 지역이 대부분 농어촌지역임을 감안할 때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관의 경우 주민들을 위한 복지센터로서의 이용 활용도가 높음
  - 노인복지관의 경우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따라 노인복지관은 최소 시 군에 개소씩은 설치 운영되어야 하고 기존에 노인복지관이 설치된 지역이라도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해 노인복지서비스 인프라 확충 필요
- 장애인복지관의 경우도 소도시 및 농촌지역의 열악한 재가장애인에게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장애인복지관 및 분관 필요



## 도가 기초자치단체간 복지재정 격차를 해소한다

도내 남부 북부간의 격차를 없애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도 차원에서 복지기본선을 규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지역 간 벌어지는 격차 해소를 위해 열악한 자치단체의 지원을 통해 도민들이 차별 없는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분야별 사회복지 이용시설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설립 지원

아울러 개소이후 사회복지시설 기관 이 운영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최소한의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지속적인 지원체계 확보

예 도와 자치단체가 운영비 지원

### III.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 필요성

사회복지종사자들은 오랫동안 사회적 봉사와 헌신이라는 미명 하에 타 휴먼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에 비해 열악함을 면치 못하고 있음  
 소외된 계층을 지원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 스스로가 과중한 업무와 근로기준법에 명시한 수당조차 받지 못하는 여건속에서 일하고 있는 현실은 일류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임  
 아울러 세계속에 경기도를 표방하고 있는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신분 안정성을 유도하고 처우개선에 앞장서야 할 것임

#### 현황 및 문제점

아래 표 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종사자의 평균급여액은 월 천원으로 대상자의 이상이 호봉이상임을 감안했을 경우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방공무원 사회복지 종사자의 전체 평균급여는 천원으로 각 호봉그룹별 월평균 급여의 차이는 만원 정도로 한 호봉간 월급여가 만원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여러 직군을 포괄한 급여라 하더라도 호봉 사이의 평균연봉이 만원 정도로 매우 열악한 급여 상황에 처해 있음을 확인한 결과이다  
 뿐만 아니라 이는 급여이외의 수당이나 복리후생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지방공무원과 사회복지 시설종사자 간의 실질적인 급여차이는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된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 등은 물론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수당에 대한 보상규정도 전혀없는 실정으로 이러한 상황은 높은 이직률로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표1〉 호봉그룹별 사회복지종사자의 월평균 보수액

호봉그룹	평균	빈도	표준편차	백분율	*호봉별 평균급여의 평균
1-5호봉	1,518,298	44,906	242,290	57.7%	1,531,972
6-10호봉	1,906,703	21,510	375,675	27.6%	1,952,606
11-15호봉	2,198,485	6,356	361,463	8.2%	2,216,437
16-20호봉	2,542,204	2,899	382,110	3.7%	2,542,311
21호봉이상	2,900,834	2,144	498,480	2.8%	2,843,643
합계	1,757,451	77,814	458,092	100.0%	2,321,769

호봉별 평균급여의 평균값은 지방공무원 보수와 비교하기 위하여 각 호봉별 평균값에 대한 호봉그룹별 평균을 계산한 것임 표본 차이를 고려하여 가중치를 동일하게 한 것임  
 자료 : 2008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보수체계 개선 연구, 보건복지가족부

위와 같이 사회복지종사자의 낮은 처우에도 불구하고 지방이양 年 이후 매년 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 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권고안이 시달되고 있으나 경기도의 경우 표 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지침 年부터 年째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 이는 높은 이직율 종사자 사기저하 서비스 품질저하 등의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표2〉 사회복지 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연도별	복지부 권고(24.5%)	경기도 반영
2005	전년도 대비 5% 인상	전년도 대비 5% 인상
2006	전년도 대비 6% 인상	전년도 대비 6% 인상
2007	전년도 대비 6.5% 인상	전년도 대비 6.5% 인상
2008	전년도 대비 7% 인상	전년도 대비 3.5% 인상
2009	연봉제 전환(3% 인상효과)	'08년 수준으로 동결
2010	전년도 대비 3% 인상	'09년 수준으로 동결

자료 : 2010 경기도청, 복지건강국 복지정책과

## 대안제시

###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복지부지침 반영

위의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기도는 현재 年째 보건복지부 권고안을 반영하지 못한 채 복지부 권고안의 年의 인건비밖에 지켜주고 있지 못하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감안할 때 최소한 복지부 권고안만큼은 준용되어야 한다

### 자녀학비보조수당 마련

현재 공무원 일반기업체 등의 경우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 조 자녀학비수당 에 근거하여 중 고등학교 자녀의 학비 일체를 자녀학비보조수당으로 지원받고 있으나 사회복지분야 종사자의 경우도 공무원과 같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열악한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는 물론이며 출산 양육 장려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 IV.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한 사회복지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 필요성

사회복지조직의 인적자원인 사회복지종사자는 여타의 조직과 달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조건이다 그것은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기술의 본질 때문인데 사회복지서비스는 복잡하고 일상적인 것이 특징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사전 규정된 절차나 규정에 의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일선 사회복지종사자들의 판단과 기술 등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복지종사자를 통하여 전달되며 그들의 지식과 능력이 서비스 전달의 질을 좌우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종사자의 질적 수준의 향상은 국민들의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질 좋은 사회복지서비스 전달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이처럼 사회복지종사자의 지식과 능력이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하기에 사회복지종사자의 전문성 증진이 매우 중요하다고 알 수 있다

##### 현황 및 문제점

경기도지역의 사회복지시설 기관의 수는 표 와 표 에서와 같이 생활시 경기도지역의 사회복지시설 기관의 수는 표 와 표 에서와 같이 생활시설 개소와 이용시설 개소로 생활시설은 전국의 가 이용 시설은 가 경기도에 분포해 있으며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는 약 만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기도청 내부자료

표 경기도생활시설 수 월


표 경기도이용시설 수 월


경기도내 사회복지종사자수는 약 만 여명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실제 교육에 참여한 수는 만 천 여명으로 종사자 인이 년에서 년에 회 정도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 교육 참여인원의 중복 등을 제외하면 년 동안 번의 교육을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경기도내 사회복지종사자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은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와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경기도내 각종 직능협회 연합회 등과 각 시설 기관 자체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경기복지재단이 설립되어 사회복지종사자 및 최고관리자 중심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과정은 각 직능단체 연합회 등에 위 수탁 형태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표 년 경기도 민간 사회복지 교육훈련 현황

기관	교육형태	교육내용	예산	교육인원
총 계				16,284명
사회복지협의회	강의	직무교육 (15회) 행정실무교육, 회계교육, spss교육, 파워포인트 교육, 인권교육, 법인운영실무 등	도예산 자부담(참가비)	876명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36회)	자부담(참가비)	2,137명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교육 (67회)	경기복지재단 자부담(참가비)	1,416명
사회복지사협회	강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57회)	자부담(참가비)	3,419명
	현장훈련	해외연수 (1회)	자부담(참가비)	24명
경기복지재단	강의	직무교육 (105회) 경영관리, 사례관리, 노인자살예방, 갈등관리, 네트워크 교육 등	도예산 자부담(참가비)	5,347명
사회복지관협회	강의	직무교육 (5회) 워크샷, 세미나, 위탁교육(경기복지재단)	도예산 자부담(참가비)	1,131명
	현장훈련	해외연수 (2회)	자부담(참가비)	33명
아동복지협회	강의	직무교육 (5회) 워크샷, 연찬회, 보수교육, 사례발표	도예산 자부담(참가비)	438명
장애인 복지시설연합회	강의	직무교육 (7) 워크샷, 연찬회, 재활프로그램 평가발표회, 홍보실무자교육, 사람,사회 그리고 사회사업	도예산 자부담(참가비)	607명
	현장훈련	해외연수 (1회)	도예산+ 참가비	24명
노인복지시설연합회	강의	직무교육 (8회) 워크샷, 연찬회, 회계교육, 호스피스 등	도예산 자부담(참가비)	406명
지역자활센터협회	강의	직무교육 (6회) 워크샷, 연찬회, 공제조합아카데미, 자활학교 등	도예산 자부담(참가비)	635명

그러나 지방분권화 및 각종 제도 정책의 도입에 따른 신규 보건복지인력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교육은 미흡한 실정이며 또한 사회복지환경변화에 따른 기존직원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이 필요하며 교육훈련에 대한 각 직능단체의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욕구가 증가하고 있음  
현재 사회복지 종사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은 직능별 다양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지만 예산 부족 등으로 사회복지종사자의 교육훈련 욕구를 채우기는 부족한 실정이다

아울러 양질의 사회복지사 양성을 목적으로        년부터 도입된 사회복지사 법정 보수교육은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며 현재 서울시 인천시 제주도 그리고 경기도 성남시가 전액 지원을 하고 있다

### **대안제시**

직종별 다양하고 체계적인 전문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비 증액  
경기도지역의 지형적 특성을 감안하여 경기도의 사회복지종사자가 가장 인접한 지역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동의 교육훈련 공간 마련  
경기도 지역의 사회복지사 법정 보수교육비 전액 지원

## V.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 현황 및 문제점

경기도의 일자리정책은 중앙정부의 계획에 따라 시행되었지만 사업수행과정에서 일정한 사업 성과를 보이고 있다 희망근로 추진에 대한 우수지자체 선정이라던가 민선 8기로부터 이어져온 청년취업프로그램인 경기청년뉴딜 정책으로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 높은 청년 취업실적을 보인 등의 사례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평가된다 광역자활센터 설립 운영 노인일자리 전담 기관의 설치 운영 등은 다른 시도에 비해 앞서가고 있는 사업들이며 민선 8기로부터 이어져서 활동이 내실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정부의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전략으로는 저소득 근로능력자를 대상으로 한 자활사업과 노동부의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과 사회적 기업 보건복지가족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비롯한 정부 각 부처의 사회서비스일자리 사업 등 그리고 장애인고용사업 등이 있다 중앙정부의 다양한 사업 내용을 고려할 때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의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은 분산된 정책 프로그램의 조정과 지역 특성에 따른 조정에 있다

### 정책 제언

지역사회 차원의 자활자립에는 공동체 정신과 혁신성 동기부여의 조화가 필요하다 개인차원의 탈빈곤은 대단히 어려운 과제이다 그래서 자활공동체 등 공동체 조직을 통해 탈빈곤을 모색한다 그러나 개인 조직차원의 혁신의지가 없는 공동체성은 지속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혁신의지와 공동체성을 조화시키는 것이 탈빈곤과 자활자립의 일차과제라 할 수 있다 자활자립에는 당사자의 의지와 동기부여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당사자들의 자조단체 조직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 외 공동체성에 기반한 지역 시민조직 비영리 비정부조직의 지원 혁신성에 기반한 기업조직 사회적 기업의 지원도 가능하다 이들 조직이 일자리 창출과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

공동체 정신과 혁신성의 조화에 기반한 부분이 사회적 경제영역이다 사회적 경제영역의 활성화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가져온다 대표적으로 사회적 기업이 있으며 광의로 보면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의 일부 경과형 시장형 사회적 일자리도 이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사회서비스 일자

리사업의 상당 수는 낮은 급여수준과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서비스 영역은 신규 고용 창출의 가능성이 높아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양적으로 적지않은 일자리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 차원에서도 적절 수준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자활사업, 장애인 직업재활, 노인일자리사업 등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사회적 기업 그리고 주거공동체 자주관리 등 민간의 자발적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사회적 경제 영역 확대와 사회적 연대의 실현을 요구한다.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은 자활대상자, 장애인, 노인 등 대상자별로 일자리지원사업의 참여 인원을 확대하고, 민간 일자리사업지원기관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광역단위 지원체계를 보완해야 한다. 아울러 사회적 취약계층 고용을 위한 노동통합 사회적 기업 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 기업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을 지향하는 다양한 사회적 기업 활동에 대한 광역단위 기획과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중앙정부 차원의 사회적 기업 정책이 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 지원이라는 협소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계를 고려하여 경기도에서는 민간의 혁신적 활동을 고무시킬 수 있는 폭 넓은 사회적 기업 지원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주거공동체 자주관리란 주거취약지역의 문제 해결을 관련기관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항상 함께하는 것이다. 자활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자활수급자들의 주체적 참여가 주요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자주관리 활동은 주거문제 등 지역문제해결과 동시에 지역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영구임대아파트의 슬럼화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지역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광역단위 자활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노인분야

장애인분야

아동분야

청소년분야

지역복지분야

노숙인분야

자활분야

보육분야

시민연대 제안

# I . 노인분야

경기도 핵심추진사업 무한돌봄네트워크사업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실버인력뱅크사업 노인돌봄기본사업 등 의 연속성 및 효과성 증진을 위한 담당직원 충원 및 정규직전환

경기도 노인복지관 시설규모 및 인력 배치 최소기준 마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 후 비영리법인 노인요양시설과 경기도와 관계 정립

노인 위기지원 시스템 구축 노인위기지원센터 운영

재가지원서비스 확대 개선방안

은빛사랑채 기능강화 방안

## □ 경기도 핵심추진사업(무한돌봄네트워크사업,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 센터 內 실버인력뱅크사업, 노인돌봄기본사업 등 )의 연속성 및 효과성 증진을 위한 담당직원 총원 및 정규직전환

### 필요성

경기도 핵심추진사업인 무한돌봄네트워크사업 및 경기도노인일자리사업의 경우 사업의 중요성 및 연속성을 고려할 때 전담관리인력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노인돌봄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는 노인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년 기준 전국 홀몸노인 명에게 기본서비스와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담관리인력인 서비스관리자가 명 활동하고 있음

안전확인 및 서비스 연계를 주요내용으로 사업의 특성상 대상 홀몸노인의 축적된 케이스관리와 서비스 연계이력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직이라 이직이 많아 사업의 전문성과 연속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경기도 노인일자리지원센터

노인일자리사업은 년 기준 전국 개 일자리 형성을 경기도는 여개의 일자리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회공헌형 여명 인력파견형 여명 시장형 여명

전담 관리인력의 활동이 중단되는 개월간은 파견처 또는 거래처 관리의 공백이 불가피함

일자리 불안정으로 전담관리인력이 다음 연도에 재계약하지 않는 등 사업의 연속성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대안제시

노인돌봄서비스사업 서비스관리자의 정규직 전환

노인일자리사업 형태를 고려한 전담관리인력의 계약기간 연장 및 수행기관 당 명 이상 정규직 전환

## □ 경기도 內 노인복지관 시설규모 및 인력 배치 최소기준 마련

### 필요성

노인 욕구의 다양화 사회변화로 인한 사업의 종류 및 사업량 확대에 따라 현행 노인복지관 시설규모의 확장 및 인력배치기준 마련으로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수행이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경기도는 시 구 군에 따라 각양각색의 형태와 시설규모 및 노인복지관 경상보조금지원 한도내에서 자율적으로 인력배치가 되어 사업을 진행중임

기본적인 노인복지관의 기본사업인 상담사업을 비롯해 개 종류 등의 사업을 관리하여야 함 이런 의미는 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고려할 때 사업에 대한 수퍼비전과 효율적인 관리와 조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노인 욕구의 다양화 사회변화에 따른 경로당활성화사업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등 회계관리인력 및 중간관리 인력의 겸직을 요하는 사업의 증가로 업무의 가중화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 대안제시

사업의 종류 및 사업량 증가에 따른 종사자 인력을 확보하도록 예산지원  
기존 시설규모를 사업진행의 적절한 규모로 확대 가능할 수 있도록 규모의 최소기준 마련 및 예산 지원

##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 후 비영리법인 노인요양시설과 경기도와 관계 정립

### 필요성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 이 후 노인복지는 시장경쟁에 의한 노인관련사업으로 변모하고 있는 추세라고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 상황이 지금 노인복지의 모습이다 그러나 노인복지는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노인의 문제이며 시장논리에 맡길 경우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복지의 방향성을 올바르게 잡아 갈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를 이끌어 왔던 기존의 비영리법인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경기도의 지속적인 지원과 이를 통한 관계정립을 통하여 비영리법인 노인요양시설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경기도 노인복지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 현황 및 문제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실시와 함께 노인요양시설의 운영주체가 다양화 되었고 이는 이용자의 입장에서 선택의 폭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서비스질의 확보라는 부분에서는 많은 우려가 되고 있다

지금까지 노인요양시설의 대부분을 비영리법인이 담당하여 왔고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등의 법을 통하여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제한하였으며 시 군 구를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하여 왔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 서비스의 질이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상당부분 안정적이었으며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되면서 수익이 주 목적인 영리시설들의 참여가 자유로워졌고 비영리법인시설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신축비 지원이 대폭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확충되어가고 있는 요양시설의 대부분은 영리시설들이며 결과적으로 영리시설의 점유율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노인요양시설운영의 목적이나 중심이 복지에서 영리로 이동하게 될 것으로 보여 지며 이는 곧 저항력이 약한 노인들의 서비스 질에 부

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를 가지게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시설에서 노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단을 통해서 받게 되는 비용의 경우 등급별로 차등수가를 받게 되고 이는 등급이 높을수록 등급이 가장 높음 높은 수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 속에 복지적인 차원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상태가 호전되면 재 등급판정에서 등급이 하향되어 요양시설에서 받을 수 있는 비용이 감소 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현 구조는 영리시설의 경우 바로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려가 되는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운영주체가 건강보험공단이 되면서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시 군 구의 관심이 점차 적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나 비난은 시 군 구에 돌아가게 되어있다고 할 수 있다

요양시설 현황

월말 현재

보건복지가족부

단위 개소 명


■ 국고지원 시설정원	16,945	36,852	41,720
■ 전 체 시설정원	29,963	56,140	76,216

### 시도별 요양시설 증가 추이

단위 개소 명


### 대안제시

비영리법인시설의 경우 수익이 발생한다고 해도 법인 목적 사업 외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재투자를 통하여 서비스의 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시 군 구의 관리와 지도를 통하여 행정 및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함으로써 법인보다 더 많은 민간 영리시설들에게 시설운영의 모델을 제시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은 현재 지원되고 있는 특수근무수당의 안정적인 지원을 통하여 복지적인 소명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직원들을 확보 유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여가활동프로그램지원비의 확대와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으로 인하여 노인들에게 지원되는 서비스가 축소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경기도는 지금까지 몇 십년 동안 노인복지사업을 지속하여온 비영리 법인시설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하여 경기도의 노인복지가 대한민국의 노인 복지를 선도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 □ 노인 위기지원 시스템 구축 - 노인위기지원센터 운영

### 필요성

현재 우리사회에서 노인들은 경제적 위기 주거의 위기 건강에 관한 위기 가족의 위기 생활의 위기 사회속의 고립 및 역할상실 등 사회적 위기와 우울 등과 같은 심리적 위기 등 다양하며 종합적인 위기에 당면하게 된다 위기는 곧 절망감으로 이는 자살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 전체 자살을 십만명당 1명으로 위이며 세이상 노인 자살율은 심지어 국가 평균의 배에 달한다 노인자살율은 세이상은 십만명당 1명 대는 1명 대는 1명에 달한다 년 경기도 자살자수는 1명이며 이중 세이상 노인자살자수는 1명으로 전체 자살자 중 1을 차지하고 있다

노인자살의 원인은 노화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장애 역할 및 경제력 상실 배우자 사별 가족으로부터의 유기 사회적 관계망 단절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고 노인자살은 충동적이기 보다는 심사숙고하여 계획적으로 자살함으로써 치명적인 자살방법을 선택하여 자살 성공률이 1로 높다 따라서 노인자살 위기 상담 및 위기에 처한 노인을 돕기 위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시스템이 필요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개입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경기도 고령자 전체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1세 세이상 1의 연령군 모두 서울 고령자의 자료 각각 보다 낮게 나타났음

경기도 고령자 전체의 우울감 경험률은 1세 1세 이상 1의 연령군 모두 동연령대의 서울 고령자 자료 각각 보다 높았음

경기도 고령자의 자살 생각률은 1세 1세 이상 1의 연령군 모두 동 연령대의 서울 고령자의 자살생각률 각각 보다 높았음

며 남 녀 고령자 모두 같은 양상을 보임

특히 경기도 고령자는 스트레스 인지율은 서울 고령자보다 낮는데 비하여 우울감 및 자살생각률이 서울 고령자보다 높은 것은 주목할 만한 결과임 따라서 경기도 고령자들은 스트레스를 인지하여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적절한 대응책이 부족하고 쉽게 우울 자살생각으로 발전하게 됨

	경기도 (지역사회 건강조사)						서울 (지역사회 건강조사)					
	60-69			70+			60-69			70+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흡연율 <sup>1</sup>	17.5	34	3.5	12.6	23.7	5	16.5	30.9	2.8	10.1	19.9	3.8
음주율 <sup>2</sup>	57.8	72.5	36.1	44.6	56.6	27.9	69.7	87.3	52.9	57.6	81.2	42.7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률 <sup>3</sup>	9.7	11.3	8.4	5.2	7.7	3.5	9.9	12.7	7.2	5.0	8.5	2.8
건강운동실천률 <sup>4</sup>	54.4	56.4	52.6	43	53.4	35.9	60.6	62.6	58.6	50.3	58.6	45.0
스트레스인지율 <sup>5</sup>	26.3	21.3	30.7	23.1	19.4	25.6	26.9	23.1	30.5	23.3	18.7	26.3
우울감 경험률 <sup>6</sup>	<b>11.9</b>	8.1	15.2	<b>12.6</b>	10	14.4	<b>10.7</b>	8.8	12.5	<b>12.4</b>	7.4	15.6
자살 생각률 <sup>7</sup>	<b>13.9</b>	10.1	17.1	<b>15.9</b>	12.2	18.3	<b>10.5</b>	7.6	13.4	<b>12.6</b>	7.5	15.8
비만인구율	28.8	26.6	30.8	21.9	19.4	23.9	25.7	23.2	28.2	20.7	18.1	22.5

**자료**                      **경기도 지역사회 건강통계**                      **서울 지역사회 건강통계**

- 평생 갑 이상 흡연한 사람으로 현재 흡연하는 사람의 비율
- 한달간 회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
- 최근 주일 동안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평소보다 몸이 조금 힘들거나 숨이 가쁜 신체활동을 회 분이상 주 일 이상 실천한 사람의 비율
- 최근 주일 동안 일간 분 이상 걷기를 주 일 실천한 사람의 비율
-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사람의 비율
- 최근 년 동안 연속적으로 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우울감을 경험한 사람의 비율
- 최근 년 동안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

**현황 및 문제점**

년 경기도는 최초로 경기도 차원에서 노인자살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노력하였다 경기도노인자살예방센터를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에 지정함과 동시에 개 시군 개소를 노인자살예방센터로 지정하여 노인자살 전문상담원을 배치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노인생명돌보미

명을 운영하고 있다 노인자살의 심각성에 비하여 정부차원의 대응이 미비한 가운데 경기도에서 노인자살예방 시스템의 기초 체계를 마련한 점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으나 실제로는 기존에 운영되던 기관에 자살예방사업 업무만 추가된 형태로 추진되고 있어 각 기관의 업무 과중이 발생하고 사업의 실효성에서도 시군간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인자살예방사업은 다양한 노인문제 위기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니만큼 노인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과 이를 위한 통합적이고 집중적인 예산 지원과 전문적인 사업추진 의지가 수반되어야만 장기적으로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는 사업이다

차적인 노인자살예방시스템 구축으로 긴급위기 노인들이 발굴되어 지원받고 있으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차 전문적인 시스템이 전무한 상태로 지나치게 시

군 자살예방전문상담원의 개인역량에 의존하고 있어 그 편차가 크며 시군 자살 예방전문상담원에게 자살위기노인에 대한 시간 상담과 지원에 관한 모든 책임의 부담이 가중되어 업무상의 큰 어려움이 있고 이는 소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자살위기노인을 지원할 수 있는 위기쉼터 긴급개입팀 긴급지원펀드 및 서비스 등 특별하고 전문적인 차 지원제도 및 서비스를 마련하여 일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자살예방전문상담원들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

### 대안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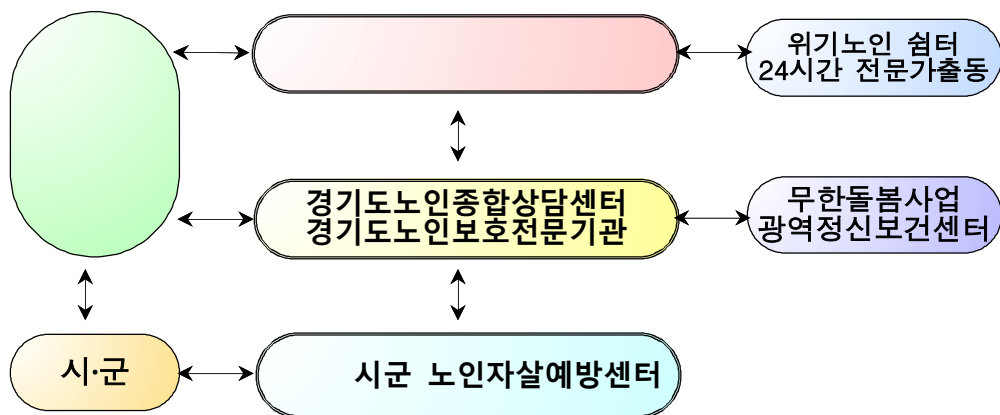
경기도노인위기지원센터 를 설치하여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위기에 처한 노인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문센터를 운영하여 시군의 자살예방사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뒷받침 하여야 한다 또한 경기도노인위기지원센터 는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 경기도노인자살예방센터 와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 시군의 노인자살예방센터 들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며 교육 연구 위기상담 등을 수행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노인들을 위해 긴급위기 쉼터

를 지역특성에 맞게 개소로 운영하고 시간 위기 긴급개입 출동 서비스를 실시한다 쉼터 상근자 및 긴급 개입팀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야 하며 시군의 자살예방상담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사안에 대해 지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노인자살 위기는 경제적 사회적 개인적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되므로 긴급하게 경제적 및 사회적 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위기노인들이 발생한다 위기노인이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지원을 하기위해서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고 그 절차를 간소화 하여야 한다 예를 든다면 무한돌봄사업에서 일정부분 자살위기노인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배정하는 방식이나 노인기금 등의 예산을 사용하는 방식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경기도 위기노인 지원 시스템



## □ 재가지원서비스 확대 • 개선방안

### 필요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보건복지가족부가 등급외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없이 재가노인복지가 표류하고 있다

재가노인복지의 노인복지가 보편적 복지로 가는 시점에서 장기요양 보험제도에 앞서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수 요소이다

왜냐하면 장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확대에 따라 다가올 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예방적 급여가 매우 중요하며 지금 그 체재를 갖추지 않으면 많은 시행착오가 필연적이기 때문이며 등급외자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재가노인의 생활은 현재 방치되고 있는 실정으로 구조적인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구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을 축소 변경하여 재가노인지원서비스로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재가노인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가사지원서비스 일상생활지원서비스 기타 서비스에 대한 실질적 도움이 필요한 요소가 없어지고 단지 사례관리를 통한 상담과 연계지원서비스로 운영되도록 개편되었다

현장의 상황 즉 재가노인의 욕구를 반영하지 못한 이론적인 사업은 위기상황의 노인 복지사각지대 노인 기본 삶의 영위를 위한 노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외면한 사업이며 공적서비스의 부재를 초래한 사업이다

이를 위해 사례관리자의 밀착형 개별 개입과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통합적 서비스 예방과 돌봄 및 기능강화를 위한 사전예방 관리시스템과 전문적인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필요성이 대두됨

### 현황 및 문제점

#### 복지사각지대 발생

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 이후 노인을 장기요양등급자와 등급외자 또는 거동이 불편한자와 건강한자로 구분한 현재의 노인복지정책에서의 거동이 가능한 노인 즉 장기요양 등급 각하대상자의 경우와 등급내 대상자로서 본인 부담금 납부가 어려운 저소득 및 차상위 대상자 위기상황에 처한 재가노인 등 복지사각지대의 발생으로 노인의 생활이 불안하고 불안감으로 인한 자살 등도 급증

## 재가어르신의 정서적 안정에 대한 욕구 증대 전문적 개입 필요

재가 어르신은 대부분 독거나 노인세대로 외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고 개인의 삶에 대해서 대체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 원인은 바로 경제적 어려움 건강 정서지원 부재등이 삶의 불만족 원인임을 알 수 있다 고독 소외 우울감 치매 등 독거어르신의 정서적 안정및 지지에 대한 개입은 상당히 부족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재가어르신의 정서적 욕구에 부응하는 보다 전문적인 개입이 요구된다

## 위험에 노출된 어르신과 노인성 질환어르신에 대한 사전예방 관리부족

갑작스런 위험에 노출 되었을 때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가족 이웃이 거의 없는 어르신에게 인적·물적 안전 관리 연계망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례관리자를 통한 지역내에 있는 병원 약국 등 보건의료 자원과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연계하여 건강개선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생활도우미를 파견하여 정기적인 건강상태 점검을 하여 응급상황시 병원이송 및 퇴원 후 관리까지 지원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노인성질환을 겪고 있는 어르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켜주기 위한 사전예방관리시스템이 필요함

## 고령화에 따른 노인생활과 부양 문제

급증하는 고령노인 인구의 다양한 욕구와 맞벌이 및 부양가족의 부담은 다양한 형태의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대표되는 노인생애주기에 맞는 노인복지제도로 이어지고 있지만 한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한 시설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는 노인복지 인프라는 다원화된 노인들의 욕구를 종합적으로 해결해 주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재가노인의 입장에서 필요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개별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네트워크 연계와 통합관리를 운영함으로써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실질적 노인생활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대안제시

### 재가노인생활관리센터 설치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 실시 이후 축소되어 재가노인지원서비스로 실시되고 있는 구 가정봉사원파견센터를 확대·개편하여 기존에 잘 양성된 인력과 복지 인프라를 활용하고 사례관리시스템 등을 보강하여 재가노인의 전반적인 생활관리로 중복 및 누락 과잉서비스를 지양하고 개인별 만족도를 높이는

매우 효율적인 제도로 정착될 수 있는 센터 설치 필요

### 재가노인 사례관리시스템을 위한 공적 전달체계의 개편

재가노인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한 사례관리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적전달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현재 재가노인의 현황과 연결체계를 위한 지원이 미비하여 사업수행의 어려움과 대상자 누락등의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와 노인장기요양이후 공적서비스와 책임부재에 대한 해결 방안이 될 것으로 사료됨

**다가오는 초고령화 시대 건강한 노인이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는 앞선 인식으로 보건복지부가 재가노인복지를 지방에 자율적으로 맡기려고 하는 시점에서 경기도는 시·군단위의 노인복지체계를 분명하게 정립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 □ 은빛사랑채 기능강화방안

### 필요성

경기도 노인인구는      년   월   일 현재      명으로 경기도 전체 인구      명의      를 차지하고 있는 고령화 단계에 있다 이중 노인성 질환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직접 수혜를 받고 있는 노인은      명   등급 판정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약      에 이르고 등급 외      판정노인은      명에 달하고 있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의 생애주기에서 주로 건강 정도에 따른 수급자격기준을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무의탁 독거노인 및 학대노인 자살우려노인 등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 요보호 노인의 수는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년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행동계획을 통해 전 세계가 공유하고 있는 노인복지 대원칙 중 노인이 가급적 오래 가정에서 오래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라는 조항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사회적 보살핌이 필요한 노인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설치 및 운영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 현황 및 문제점

이에 지난      년 경기도는 치매 및 중풍 어르신을 극진히 모시는 마음을 담아 그 옛날 사랑채라는 공간을 통해 서로 함께 위로를 느끼고 작은 나눔이 오가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은빛사랑채** 사업을 실시하였다

이는 기존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던 주간보호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대폭 강화하여 소득계층 구분 없이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부터      까지 케어라는 파격적인 운영을 통해 노인 당사자 문제뿐만 아니라 부양가족들의 부담까지 공공의 책임으로 나누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이러한 운영목표를 가지고      년까지 총      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경기도 전역에 총      개소의 은빛사랑채를 개소함으로써      명의 치매 중풍 어르신들을 케어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 과정 중에 있었다

그러던 중      년   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실시에 따라 주 야간보호 서비스

의 운영책임을 민간으로 완전 이양함으로써 은빛사랑채 운영계획은 사실상 전면 중단되었으며 개까지 개소를 늘리겠다는 계획은 개소 지정에 그치게 되었다

물론 민간의 사회복지영역 진출을 허가함으로써 경기도 내의 절대적인 주야간보호센터는 년 월 말 현재 개소와 주간보호 이용노인 명으로 경기도의 은빛사랑채 운영계획보다 확대되었지만 그 서비스의 내용과 질적인 부분은 기관별 격차가 크고 은빛사랑채 운영목적과는 상이하다 평가할 수 있다 더욱이 입소인원 인 기준으로 비현실적인 보조금 차등 지급 등으로 그나마 은빛사랑채 정신을 바탕으로 서비스의 누락 없이 유지를 하려던 기관들도 운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기관을 폐쇄하거나 기능을 변경하려는 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 서울시의 경우는 이른바 프로젝트 일환으로 경기도의 은빛사랑채를 모델로 한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를 운영함으로써 재가복지사업을 공공의 책임영역으로 인정하고 실천을 해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선구적인 노인복지 모델인 은빛사랑채가 그 정체성을 잃고 있는 부분은 제도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지 못한 아이러니한 상황이라 할 수 있겠다

## 대안제시

### 은빛사랑채 사업의 재개 및 확대 지정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의 시작과 동시에 중단된 은빛사랑채 사업의 재개 현재 개소 지정에서 중단된 은빛사랑채 경기도 최초 계획인 개소 이상 지역별 확대 지정

### 은빛사랑채 특화사업 지원

노인장기요양법상 운영되는 주야간보호센터와는 구별되는 특화사업 지원

#### 대상노인 확대 및 이용료 지원

등급 외 노인 중 가정 내 케어가 어려운 노인 노인확대 및 자살우려 등 일상생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노인 등

예방적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문제발생 이후 부담비용 절감효과 기대

#### 주야간보호 이용시간 확대 운영비 지원

현행 센터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야간 및 휴일 케어에 대한 시간을 은빛사랑채 사업을 통해 규격화하고 이에 수반되는 운영비 및 종사자들의



연장근로지원금 지원을 통해 실질적 가족들의 부양부담 경감도모  
보호노인 부양가족 지지사업 지원  
전담 가족 사례관리자 인건비 지원을 통한 부양가족 내 문제에 대한 실질  
적 상담 및 교육사업 전개

## II. 장애인복지분야

중증장애노인을 위한 노인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확충

장애아 통합보육 교육 지원센터 운영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관리감독 강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정책적 육성

장애인주 단기보호시설 운영의 현실화

정신장애인 탈원화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시군구 각 이용 입소  
개소 이상 사회복귀시설 확충

전국대비 경기도 사회복귀시설 확보를 위한 방안

## □ 중증장애노인을 위한 노인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확충

### 필요성

장애인 중에는 장기적인 요양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

노인장기요양법에 노인뿐 아니라 실질적인 노령상태인 세 미만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제외 미국의 경우 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은 장기요양법의 대상임

세 미만의 중증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주거지원 프로그램이 확대되어야 함

### 현황 및 문제점

장애인장기요양제도 시행 후 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요양 절대 부족

수급자 위주의 무료시설이 많아서 차상위 서민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보호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시설 이용 시 이용부담 과중

시설이용료에 대한 자부담 가중 중산층 대상 유료시설 월 만원 서민 중산층 대상 실비시설 월 만원

시설 운영비 부담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수급자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요양시설 부족

신축에 따른 지방비 부담 과 주민의 혐오시설 기피가 시설확충에 어려움

경기도중증장애인 현황 년 월말 기준

구분	경기도 거주장애인 추정인원 기준	등록장애인현황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급장애인	세이상 노령장애인
현황	명	명	명	명

### 대안제시

개 시군별 장애노인을 위한 시범 공동생활가정 설치 운영 개 시군 천 만원 운영비 지원 개소 억 천만원

향후 년간 단계적으로 설치 총 개소 설치

연 도	계	년	년	년	년
설치 수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 □ 장애아 통합보육(교육) 지원센터 운영

### 필요성

장애아동의 보육 교육 정책은 통합의 기조로 가고 있는 추세이며 장애아 부모들의 통합에 대한 욕구도 일반화되어 가고 있음

장애아동의 통합보육이 증가하고 있으나 유아보육시설과 교사들은 장애아동의 지도경험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에 대한 이해정도 장애에 대한 진단 지도 아동 수 일반아동 부모의 인식 및 이해에 대한 대처방법 미흡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적절히 준비된 통합보육은 장애아나 일반아동에게 많은 도움을 주지만 준비 없이 시행하면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경기도는 장애전담 어린이집 통합지원교사 보육비지원 등의 정책을 펴고 있으나 장애아동의 적절한 보육여건을 조성하기에는 역부족임

통합보육은 장애아동에게 장애의 조기발견과 조기진단을 통해 장애의 극복과 차 장애를 예방할 수 있으며 조기특수교육과 전인적인 유아교육을 통해 균형 있는 발달을 도모할 수 있으며 조기통합의 경험은 장애아동에게 사회적응 능력을 향상시켜 사회의 바람직한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일반 아동에게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성숙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며 또래 아동과의 놀이와 상호작용을 통해 많은 발달을 할 수 있음 그리고 장차 장애에 대한 편견을 갖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음

### 현황 및 문제점

경기도에는 만 여명의 장애아동이 있으며 개의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개의 장애아통합교육시설 개의 방과 후 시설 시간이나 휴일에 보육하는 시설은 각각 개소 개소에 불과함 경기도 월말 기준

단위 개소 월말

구 분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장애아통합	방과후	시간연장	시간	휴일
전국							
경기도							
서울							

통합교육의 기회는 넓어지고 있으나 적절한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지원하

기 위한 지원센터가 필요함

## 대안 제시

장애아동통합보육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개 장애인복지관을 활용하여 부설로 설치 운영하는 방안이 적절함

시군 통합보육지원센터는 유아통합보육시설에 전문가 특수교사 언어치료사 심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을 파견하여 장애아동 진단 및 교육 유아교육교사 교육 장애아동 부모의 가족지원 및 일반아동 부모교육 등을 지원

통합보육지원센터운영 규모 및 예산

인력규모   명 특수교사   명 사회복지사   명

전체예산    억원   억X   개소

##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관리감독 강화

### 필요성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장애인생산품에 대해 연간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도록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 조와 제 조에 규정

경기도 또한 장애인 생산품 판매촉진을 위해 년 월 일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를 제정하였지만 강제력이 없는 권고사항으로 별척조항이나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구매실적이 저조함

또한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홍보시 거래처 변경에 따른 불편사항과 행정편의를 선호하는 구매 담당자의 업무관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현황 및 문제점

경기도가 개 시군의 장애인 생산품 구매 내역을 분석한 결과 과천시 는 개의 우선구매품목 억 만원 정도 모두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 이천시도 의 구매율을 보이는 반면 고양 안산 안성 연천 양평 포천 용인 오산 남양주 등 개 자치단체가 를 넘지 못함 특히 구매비율이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 사무용소모품의 경우 개 시 군이 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대안제시

년 월 제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위원회를 보건복지부 산하에 두고 매년 구매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조차 동법이 시행된지 년여가 지난 후에서야 겨우 동 위원회를 구성하여 년 처음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등 개 단체의 우선구매 계획을 세웠는데 년은 지난해 계획금액인 억원보다 증가한 억원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계획일 뿐이고 경기도만을 한정하여 볼 때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계획이다 특히 경기도 제정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조례의 경우에도 우선구매의 의무사항이나 협조요청 등에 대한 사항만이 있을 뿐

아무런 별척 조항이나 평가에 대한 인센티브 조항이 없는 사항에서는 실효성이 의심될 뿐이다 이에 경기도만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 위원회를 민관 합동 팀으로 구성하여 실질적인 구매 계획과 우선구매 촉진 홍보방안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경기도 고유의 장애인생산품 브랜드를 개발하여 기존의 장애인생산품이 갖는 낮은 품질과 높은 가격 강압적인 판매라는 이미지를 지자체 차원의 제품으로 규격화 되고 높은 품질의 제품임을 경기도가 검증하고 보증하는 제품으로 인식이 전환 되어야 함

경기도 산하 시 군 및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에 대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관련 정기적인 교육과 판촉활동이 경기도와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 함께 펼쳐 각 지자체 및 공공기관 먼저 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장애인 복지법 제 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바목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생산품은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도내 시 군의 각 구매 담당자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인용하여 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홍보 및 독려할 필요가 있음

##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정책적 육성

### 필요성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통합화를 실현해 나가기 위하여 필요한 장애인직업재활 시설들이 판매망확보 영업수익 증가에 대한 부담감 근로장애인에 대한 인건비 부담을 안고 있으므로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정책적 육성이 필요함

년 장애인복지법의 개정 이후 년 월 말까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유형을 가지에서 가지 유형으로 개편해야 하는 시점에서 시설전환을 위한 지자체의 예산을 확보하여 직원배치 운영비 장비보강이 이루어져야 함

### 현황 및 문제점

표 경기도직업재활시설 현황

현재


자료 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경기도에는 개 유형에 개소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있는데 년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가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상 가장 큰 문제점은 인력부족 운영비 부족 마케팅 판매망 부족 열악한 시설환경으로 나타남

년 월 말까지 개 유형에서 보호작업장이나 근로작업장으로 유형을 개편해야 하는 시설이 개소 이상 해당 중증장애인의 직업훈련을 목적으로 운영하였던 작업활동시설이나 직업훈련시설은 시설을 전환하게 되면 고용인원 이상에게 최저임금의 를 지급해야 하므로 근로장애인에 대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어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 장애인에 대한 임금지급이 시설 평가에 주요 기준으로 작용하여 근로능력이 약한 중증장애인을 배제한 상태에서 경증의 장애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내게 된다 이는 직업재활을 복지화 재활의 개념은 배제한 채 고용과 소득의 개념으로만 접근한 것임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보호작업장에서는 판매망의 확보와 매출의 증대가 절박한 과제임 그러나 근로작업시설을 제외하고 시설 인력은 시설장을 포함



명으로 제품생산 및 마케팅 장애인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 훈련을 담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함

직업재활시설의 영업수익의 증가를 위하여 구매기관에 대한 신속한 납품과 사후서비스가 필수적인데도 불구하고 차량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납품에 곤란을 겪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나 지자체에서 시설 장애인보다는 재가장애인의 직업재활시설 이용을 권장하는데 실질적으로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는 재가장애인이 시설 이용하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되어 출근용 차량이 필수적인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유형 개편에 따른 경기도 개 시군에 있는 모든 장애인직업재활들이 공통된 운영 매뉴얼을 가지고 실천이 될 수 있어야 함

유형개편을 위한 시설의 자격기준을 요구하기 전에 노동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유형개편에 따른 시설운영을 위한 인력 운영비 장비의 지원이 선행되어야 함

개별시설의 마케팅 및 판로개척을 위해 광역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대규모 이용시설 등에 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가 대량의 물량을 수주하여 생산시설에 배정하고 생산하여 판매하도록 지원 요망

직업재활시설에 지원하는 인력을 시설 당 총 인원으로 지원하여 시설의 특성에 맞게 구성하도록 요망함

## □ 장애인주 · 단기보호시설 운영의 현실화

### 필요성

최근 시설보호에서 탈 시설화 소규모화 되어가고 있는 사회복지 환경의 변화 속에서 장애인주 단기보호시설이 증가하는 추세임  
장애인주 단기보호시설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시설수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주 단기보호시설에 대한 운영지침이 미비하여 전반적인 개편을 통해 생애주기별 욕구에 따른 사회적 지원체계를 명확히 해야 할 것임

### 현황 및 문제점

경기도내 주 · 단기보호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주간보호시설은      년 개소에서      년 개소로 단기보호시설은      년 개소에서      개소로 증가함  
현재 보조금은 운영비와 인건비가 통괄로 집행되고 보조금의      가 인건비로 지출 나머지는 이용료 수입과 후원금 등 시설 자체 수입으로 충당해야만 하는 상황임 따라서 이용 장애인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 제공 및 운영에 어려움

서비스 제공인력은 주간보호시설은      명 단기보호시설은      명으로 해당인력에는 행정업무 인력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시설에서 종종 장애인을 기피하기도 하고 서비스 질이 단순 보호에 머무를 수 있음

장애인 주 · 단기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포함 들을 대상으로 일정금액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용료 징수 금액을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각 시설마다 이용료 수준의 격차가 발생하고 현실적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들에 대한 이용료 징수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 대안 제시

사회복지 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 운영시간 이용료 인력지원 사업내용 등의 수정과 장애연령 유형 정도별로 세분화되고 실질적인 운영지침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함  
이용자의 다양한 수준과 욕구에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차등적 인력지원 및 시설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융통성 있는 예산 지원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 운영비 지원 시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하여 별도로 지원해야 하며 이용료 금액의 상한선을 마련해야 함

## □ 정신장애인 탈원화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시·군·구 각 이용입소 1개소 이상 사회복지시설 확충

### 필요성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선행 되어야 하는 사업이 인권이 보장된 지역사회속에서 정신장애인들이 안정된 삶을 지원하기 위한 탈원화 탈시설화이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 현 정신보건사업이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이 사회복지시설 확충이다

경기도의 주요 정신보건관련기관으로는 정신보건센터 사회복지시설 정신요양 시설 의료기관이다

각 기관의 역할으로는 정신보건센터 정신질환자 인식개선 및 권익증진 아동 청소년 노인 정신건강증진 자살예방 등으로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을 주요 사업을 하고 있으며 정신요양시설은 정신요양 보호를 주우선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의료기관에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이다 사회복지시설은 탈시설 탈원화를 통해 지역사회로 유입되는 당사자들을 병원 요양원에 재입원 소시키지 아니하고 사회적응훈련 직업재활을 통해 조기에 사회복지할 수 있도록 대상자에게 직접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이다 그러므로 탈원화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이 지역사회에 확보되어야 한다

국내정신보건사업을 주도하는 경기도는 탈원화를 위해 더 강한 정책의지를 정신보건센터에서 하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로 유입되는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확충 방안을 놓고 경기도는 민과 함께 깊이 있는 고민을 하여야 할 것이다

### 현황 및 문제점

표 은 민 관이 파트너로 함께 운영되어지는 정신보건센터는 시 군 구별로 각 개소 이상 총 개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표 에서 제시되어진 중증정신장애인 명은 정신보건센터에서 탈원화사업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집중적인 재가관리 대상자이며 그 중 명은 사회복지시설 이용 대상자이다 그러나 표 에서 현재 사회복지시설 이용대상자는 명으로 경기도 전체 대상자 에 미치는 수준이다

표 은 한국사회복지시설 현황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이용시설은 서울 개

경남 부산 울산 개 다음으로 경기도 개 대구광역시 개이다  
 표 에서 제시한 년 한국사회복지시설 현황에서 경기도는 전국사회복지시  
 설 중 만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 또한 년 년 동안 단지 주  
 거시설 명 주거 개소 만이 증가하였으며 년 신고만 진행된 이용시설  
 개소 만 증가하였다 국내 및 국외 정신보건사업의 모델을 제시하는 선두주자  
 경기도로서는 매우 더딘 증가를 보이고 있다

표 경기도 정신보건센터 현황 현재

합계	광역정신보건센터	시·군·구 정신보건센터
36개	1개	35개

표 한국사회복지시설 현황 현재

구분	이용시설 (20-70인)	입소시설 (30-50인)	이용입소 병행시설	주거시설 (4-10인)	계
서울특별시	26	6	0	46	78
<b>경기도</b>	<b>10</b> (1개 미개소)	<b>1</b>	<b>0</b>	<b>11</b>	<b>22</b>
인천광역시	4	0	0	2	6
강원도	0	0	0	0	0
충북, 충남, 대전	8	5	1	13	27
대구광역시	9	0	1	3	13
경상북도	7	1	2	2	12
경남, 부산, 울산	12	0	3	1	16
광주광역시	6	0	1	1	8
전라남도	0	0	1	1	2
전라북도	3	2	6	3	14
제주도	2	0	0	0	2
<b>합계</b>	<b>87</b>	<b>15</b>	<b>15</b>	<b>83</b>	<b>200</b>

표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유형 현재

		총 이용 인원(명)	총 시설 수	이용	입소	이용 입소병행	주거시설
2008	전국	4,423	173	104			69
	경기도	543	<b>18 (10%)</b>	9	1		8
2009	전국	4,903	199	86	14	15	84
	경기도	558	<b>21 (10.5%)</b>	9	1		11
2010. 4	전국	4,933	200	87	15	15	83
	경기도	588	<b>22 (11%)</b>	10	1		11

출처: 한국사회복지시설, 「<http://www.kpr.or.kr/>」

표 경기도 정신건강 대상집단 현재

	인원(명)	진단유병율 (2.16%)	중증정신장애인 (11.6%)	만성의 중증장애인(20%)
경기도인구	11,720,000	253,152	<b>29,365</b>	<b>5,873</b>
집단별 설명		알코올리즘, 인격장애, 정신지체까지 포함	입원치료를 요하는 집단으로 지역사회에서 집중치료 및 재가관리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보호
담당 정신보건기관			<b>탈원(시설)화 필요집단 정신보건센터</b>	<b>사회복지시설</b>

\* 위 %는 (보사부, 1987) 통계

## 대안제시

입기 동안 경기도 시 군 구별로 입소 이용 주거의 다양한 사회복지시설  
전국대비 경기도 확보

확보를 위해 시군구 개소 이상 이용 주거 사회복지시설 설치 운영

## □ 전국대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20% 확보를 위한 방안

### 필요성

지역사회 정신장애인 재활 기관으로는 사회복지시설과 정신보건센터를 들 수 있다. 정신보건센터와 사회복지시설 설치시 운영 주체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같은 방식이나 운영 방식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정신보건센터는 다음해에 개소하는 것을 목표로 공공건물지원 및 예산을 산정 지원하는데 반하여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개인 또는 법인이 건물을 마련하여야 하며 예산은 일정기간 년 이 지나 지원받는 체제로 되어 있어 사회복지시설 설치가 증가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 대안제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시 정신보건센터와 같은 선 예산지원 형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설치 후 위탁운영  
지자체에서 책임지고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정책의지 강화

### III. 아동복지분야

부적응 시설 학교 사회 아동 영역별 전문보호치료 영역확보

요보호아동의 자립지원 강화

지역사회아동보호 강화 아동복지시설의 다기능화를 통한



## □ 부적응(시설·학교·사회)아동 영역별 전문보호치료 영역확보

### 필요성

영역별 보호치료시설의 부재

현재 경기도아동상담소가 부적응아동 학교 사회 시설 등의 상담 치료 시설로 기 운영 중이나 영역별 성폭력 학교폭력 비행 심리정서 장애 등 전문적인 상담치료와 보호를 통해 또래에 맞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들을 분리하여 보호하고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이 적어 또 다른 사회적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음

부적응아동의 확산

이러한 보호치료시설의 부재로 더욱 다양한 문제를 양산함은 물론 이들로 인하여 더 많은 사회부적응 아동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 현황 및 문제점

전국 보호치료시설 현황

단위 개소 명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경기	충북	전북	전남	경남
전문보호 치료시설	시설 수										
	직업훈련										
	보호아동										
보호 치료시설	시설 수										
	보호아동										

도내 사회부적응아동 현황

단위 개소 명

구분	치료대상							
	계	중복장애 가지이 상	정서장애	학습부 진	발달장애	비행	기타	
계								
도상담실								
시설아동								

## 대안제시

현재 개 시군에 소재한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정원축소 기능전환을 통한 부적응아를 위한 영역별 전문 보호치료 기능을 가진 시설 개소 이상 확보운영

기 상담 및 치료 기능을 하고 있는 도 아동상담소 역량강화

상담소 및 치료실 지원확대 청소년상담센터와 인건비 지원 통일 아동복지시설 개소 당 상담사 혹은 치료사 인 배치

기존 아동복지시설의 기능전환에 대한 조례제정으로 최소 개소 이상 시범운영

## □ 요보호아동의 자립지원 강화

### 필요성

요보호 시설 소년소녀가정 아동은 일반가정의 아동에 비해 특기 적성을 살릴 기회의 상대적 부족  
 일반아동에 비해 진로준비를 위한 학습 기능향상 프로그램의 전문적 수학 교육의 기회가 부족  
 자립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나 모델링 없이 사회적응에 필요·충분한 경험 없이 사회로 진출함으로써 또 다른 사회적 역기능초래  
 퇴소와 동시에 성인으로서의 자기책임감과 사회적 역할을 부여받게 되지만 일반가정의 지지를 받은 아동과는 달리 자신들의 사회적응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지 못하기도 함  
 퇴소 후 주거불안정으로 초기사회적응에 실패할 우려가 큼  
 미국의 경우 만 세가 되면 개인별 자립준비사정 사례계획서비스 등의 자립준비프로그램이 법제화되어 아동상담소를 중심으로 제도적 운영

### 현황 및 문제점

도내 자립지원프로그램 실시 현황 단위 명

구분	대상아동 명	지원아동 명
자립프로그램		
대학입학아동입학금		
대학재학아동등록금		
자립관		
직업학교		

### 대안제시

초등학교 학년 이상 전 시설아동에게 자립프로그램 실시  
 대학입학아동에 대한 입학금 이외에 등록금 추가지원  
 공공성을 띤 주거지원서비스 마련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밀착형 소규모 자립형공동생활가정 다수 지원  
 직업학교 운영 자격증 취득 취업준비교육 직업교육 사후관리  
 조례제정을 통한 요보호아동에 대한 개인별 자립준비사정 사례계획서비스 계획 등으로 이들의 바람직한 초기사회적응 및 자립 도모

## □ 지역사회아동보호 강화(아동복지시설의 다기능화를 통한)

### 필요성

가정적 환경에서의 양육 우선

아동권리협약의 준수와 이행을 위한 정부의 요보호아동에 대한 가정사회보호시스템 강화의지로 국내입양 가정위탁의 활성화 공동생활가정 확대 아동복지시설의 기능다양화를 꾀하고 있음

지역사회의 욕구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의 향상과 더불어 발생하는 아동양육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아동 일시 및 단기 보호 인터넷 중독 및 아동 성장·양육에 따른 각종 문제해결을 위한 아동전문심리상담센터 등에 대한 욕구가 나날이 증진되고 있으나 이를 위한 기관지원은 아직 미흡한 실정

지역사회아동의 복지증진 도모

아동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살며 존중받고 안전하게 성장하는 사회의 실현을 위해서는 요보호아동 뿐 아니라 지역사회아동의 복지증진욕구 수용으로 아동복지센터 서울의 어린이회관 아동복지센터가 중심에 서도록 해야 함

### 유휴 인력 및 공간 활용으로 지역사회 아동복지사업의 거점화

현재 아동복지시설은 도내 개 시군에 개소가 있으며 추후 시설보호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요보호아동의 가정보호 강화시스템으로 아동복지시설의 인적·물적·환경적 유희자원이 늘어나게 됨

지역사회 내에 위치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의 공간을 지역아동복지센터의 거점으로 활용하여 아동 단기 일시보호 방과 후 보호 아동상담 부모교육 독서실 및 컴퓨터실 개방 체육시설 및 놀이공간 제공 지역사회 주민회의장 등으로 지역사회 아동 및 부모가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함

구심점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행 아동복지관련 사업의 체계화 필요

현재 각 단체의 이익에 따라 우후죽순으로 체계없이 생겨나고 있는 각종 아동복지관련 기관을 네트워크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각 시군에 위치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을 활용하고 그 협회를 활용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보여짐

요보호아동의 발생에서부터 상담 보호에 이르기까지 그 처리과정을 한 곳에서 관리하여 예산지원 및 중 중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대상자 또한 중 중 시달리지 않고도 원하는 지원을 좀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

이를 위해서는 행정기관이 각 단체의 이익에 끌려가지 않고 민관공동으로 아동에게 필요한 지원을 연구하고 개발하여 실천하는 태도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년 월말 현재 경기도내 아동복지시설

구 분	계	아동일시보호시설	영아시설	육아시설
개 소	29	2	4	23
보호아동수	1950	88	223	1,639

자료 경기도아동복지협회 시설현황 참고

년말 현재 경기도내 아동복지시설 주거형태 현황

구 분	계	공동주택형	단독주택형	복도식건물
개 소	29	15	5	9 ※ 영아시설 및 일시보호시설 포함

자료 경기도아동복지협회 시설현황 참고

년말 현재 경기도내 아동복지시설 법인 고유업무 외 운영현황

구 분	계	유치원/어린이집	아동복지관	노인전문요양원	지역아동센터
개 소	9	5	1	5	3 ※정부지원/시설자체운영

자료 경기도아동복지협회 시설현황 참고

년말 현재 경기도내 아동복지시설 간호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현황

구 분	사회복지사	간호사	영양사
개 소	438	22	22

자료 경기도아동복지협회 시설현황 참고

## 대안제시

### 조례제정 등 정책적으로 아동복지시설 기능다양화 적극추진

시설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아동의 보호양육기능에서 지역사회아동을 위한 종합서비스시설로 적극 추진지원 예산 인력 시설 등

아동시설의 공간 및 전문인력 활용을 통한 지역사회아동복지기능강화

기존 양육시설의 성격에 아동상담 일시보호 가정위탁 입양 급식 프로그램제공 등의 기능을 정책적으로 추가하여 아동시설의 기능다양화 적극 추진

지자체 및 시설운영자의 의견 수렴 기회마련

## IV. 청소년분야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완료 및 예산 증액

찾아가는 청소년 동반자 사업 지역 및 인원

초 중 고등학교 단계별 인성교육 및 학교폭력예방교육 실행 강화 및  
학교폭력 전담 상담원 배치

##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구축완료 및 예산 증액

### 필요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도내 청소년의 위기 예방 및 지원강화 필요

위기청소년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저출산 시대 기존 자원의 역량개발 극대화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년 이후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해 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 및 시군청소년지원센터를 허브기관으로 도는 국비 및 도비 시군은 국비 및 시군비로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이하 를 구축 운영 중

년 현재 도센터를 포함 개 년 개 신설 포함 시군에서 을 구축 운영 중이나 시군지원센터의 경우 센터당 천원 국비 시군비로 증가하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한계 발생

미설치 지역의 개 시군 경우는 그나마도 소외되어 있어 지역별 청소년 복지의 수준의 편차 발생

최근 년간 경기도내 청소년의 학업중단 가출신고 학교폭력 청소년범죄 자살 등의 위기 통계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최근 년 도내 위기청소년 통계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8월)	비 고
학업중단	22,357	23,043	13,600	교육청자료
가출신고	2,775	3,651	2,568	경찰청자료
학교폭력	5,213	5,903	3,497	"
청소년범죄	22,989	26,295	18,906	"
자 살	175	180	-	통계청자료

년도 경기도 청소년 위기실태조사에서도 청소년인구 세 총 천명 의 천명 가 고위험군으로 분류

고위험군 천명 즉시 상담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잠재적위험군 천명 고위험군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

## 대안제시

개 시군으로 구축 확대

운영 강화를 위해 현재 국비 시군비로 운영되는 지역별 예산을 두배 이상 확대하여 운영 내실화 추진

## □ 찾아가는 청소년 동반자 사업 지역 및 인원

청소년동반자 위기 청소년들의 가정이나 학교 등으로 직접 찾아가 기관중심의 서비스가 아닌 청소년이 접한 환경체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개개인의 욕구와 환경에 맞는 맞춤형 차별화된 지원을 제공하는 전문상담 프로그램 임

### 필요성

사회 환경적인 요인으로 가출 학교폭력 왕따 인터넷 중독 은둔형 외톨이 등 위기청소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문제 해결을 위한 자발적인 기관 내방에 소극적인 위기 청소년 특성 상 찾아가는 상담자 필요

위기 청소년의 생활근거지를 중심으로 이용 가능한 자원 발굴 및 연계를 통한 효과적인 개입 방안마련 필요

경기도 대부분의 시군은 지역이 넓고 청소년 지원을 위한 인프라는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어 위기청소년이 지원을 받기 위해 기관을 내방하는 것에 어려움 발생

### 현황 및 문제점

도센터를 포함 개 시군지원센터에서 찾아가는 동반자 사업 운영 중임

청소년동반자는 안에서 상담 및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는 핵심인력이며 지역사회 아동 청소년을 위한 전문가로서 자리매김 하고 있음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수혜청소년 만족도

년 만족도

경기지역 만족도

년 지침 기준 전일제 명 시간제 명을 배치 명을 개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경기도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결과 천명 의 고위험 군이 있어 실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지속적인 인구의 증가 및 도시의 확대로 개입이 필요한 위기청소년은 증가하나 현 동반자 인원으로는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적정인원 확보 절실

동반자 사업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신분의 불안정함 전일제는 계약직으로 운영 시간제는 주 시간 근무으로 지속적인 근무에 어려움 발생하고 있으나 국가 시행 사업으로 중앙정부에서 해결책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사업 수행 인력에 대한 정규

직화 등 근무 안정성 보장 절실

## 대안제시

전체 시군으로 동반자 확대 및 도 및 시군비 확보를 통한 인력 증원  
동반자 신분 안정을 위한 도비 지원 확대

## □ 초·중·고등학교 단계별 인성교육 및 학교폭력예방교육 실행 강화 및 학교폭력 전담 상담원 배치

### 필요성

학교폭력 증가 및 저연령화 대담성 및 조직화되어 가고 있어 현재의 체계로는 학교폭력 예방 개입 사후관리에 한계 발생

인성교육 및 학교폭력 위험성을 조기에 교육시켜 학교폭력 발생 원인과 피해학생의 고통에 대한 공감능력을 증진시킴으로써 학교폭력의 주체인 학생들 사이에서 스스로 학교폭력을 회피 또는 억제하는 학교문화를 형성해야할 필요성 증대

학교폭력의 특성 상 학교 외부의 지원에 의한 중재 및 가 피해 학생에 대한 상담 개입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학기별 회 이상의 예방교육을 실행하도록 있으나 예방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체계 부재 및 전문 인력부족으로 적절한 교육 실시에 어려움 발생

학교폭력 발생 시 상담지원센터 등에서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구성에 참여하고 있으나 인력의 한계 등으로 모든 사안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한계 발생

### 대안제시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실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존의 법령을 보완하여 조례 제정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자원 확대하고 학교폭력 발생 시 즉각적으로 개입하여 상담 중재 사후관리 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 확대

## IV. 지역복지분야

지역사회복지관 미설치지역 개 시·군에 사회복지관 설치  
로 지역 간 복지서비스의 불균형 해소

지역사회복지관을 무한돌봄센터와 연계한 사례관리 거점센터로  
지정

재단으로 이관된 직능단체 보조금 경기도로 환원

사회복지전문가 양성체계 구축 및 지원

## □ 지역사회복지관 미설치지역 11개 시·군에 사회복지관 설치로 지역 간 복지서비스의 불균형 해소

### 필요성

인구 만명 기준 개소의 지역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하여 경기도내 개 시군 중 개의 시·군에 개 지역사회복지관 부천의 경우 개의 복지회관이 포함되어 있음 이 설치되어 운영 중으로 지방자치단체별 편차가 크며 개 시·군에는 사회복지관이 미설치된 상태로 지역간 복지서비스가 불균형을 이루고 있음

따라서 사회복지관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미설치된 지역에 사회복지관 설치가 필요함

### 현황 및 문제점

지역사회복지관 운영은 지방분권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사회복지사업으로 신축과 기능장비보강사업비에 대하여만 국도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신축이후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사회복지관 운영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신축할 재정이 있어도 신축후의 운영비가 없어 사회복지관 신축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며 경기도내 개 시·군이 사회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서비스의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음

표 년 월 현재 사회복지관 현황 시군 가나다 순

시군별	복지관명	유형	시군별	복지관명	유형	시군별	복지관명	유형
고양시 (5)	문촌7사회복지관	다	성남시 (5)	산성종합사회복지관	나	안성시(1)	안성종합사회복지관	가
	문촌9사회복지관	다		성남종합사회복지관	가	양평군(1)	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	가
	원당사회복지관	나		중탑종합사회복지관	나	오산시(2)	오산종합사회복지관	나
	일산종합사회복지관	가		청솔종합사회복지관	가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	가
	힌들종합사회복지관	가		한솔종합사회복지관	가	용인시(1)	용인종합사회복지관	가
과천시 (1)	과천종합사회복지관	나	무봉종합사회복지관	가	의정부시 (1)	의정부시종합사회복지관	나	
광명시 (3)	광명종합사회복지관	가	수원시 (4)	연우사회복지관	다	평택시(2)	부락종합사회복지관	나
	철산종합사회복지관	나		영통종합사회복지관	가		합정종합사회복지관	나
	하안종합사회복지관	가		우만종합사회복지관	가	포천시(1)	포천종합사회복지관	가

구리시 (1)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가		거모종합사회복지관	가	하남시(1)	하남종합사회복지관	가	
군포시 (3)	가야사회복지관	나	시흥시 (6)	대야종합사회복지관	가	화성시(1)	화성시남부종합사회복지관	가	
	매화종합사회복지관	나		목감종합사회복지관	나				
	주몽종합사회복지관	나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	가				
부천시 (9)	고강복지회관	가		안산시 (4)	정왕종합사회복지관	가			
	덕유사회복지관	다			함현상생종합사회복지관	가			
	부천종합사회복지관	가			군자종합사회복지관	나			
	상동종합사회복지관	나	본오종합사회복지관		가				
	삼정복지회관	가	안양시 (3)	부곡종합사회복지관	가				
	심곡복지회관	나		초지종합사회복지관	가				
	원종종합사회복지관	가		부흥사회복지관	다				
	춘의종합사회복지관	나		비산사회복지관	다				
	한라종합사회복지관	나		율목종합사회복지관	나				

## 대안제시

사회복지관이 미설치된 개 시 · 군지역 양주시 가평군 남양주시 파주시 이천시 여주군 김포시 동두천시 광주시 의왕시 연천군 에 지역사회복지관 신축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 지역별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함

## □ 지역사회복지관을 무한돌봄센터와 연계한 사례관리 거점센터로 지정

### 필요성

경기도내 1개 사회복지관의 정체성 확립과 복지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한 복지환경을 발전시키고 사회복지관만이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성인 여성 등 지역사회의 전 대상층에 대한 사회복지 개입을 실천하고 있음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의 사례관리 서비스 모델 개발과 다양한 자원체계를 적극적으로 유입 연계함에 그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음 이에 무한돌봄센터 거점 역할에 대한 사회복지관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함

### 현황 및 문제점

사회복지관과 타 사회복지기관간의 사례관리 연계 형태와 사업의뢰 등에 대한 경기도 내 지역별 조율과 조정이 필요하며 사례관리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위한 사회복지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검토와 사업의 조정과 사업대상체계에 대한 내용 개편이 요구됨 또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질적인 평가와 정성적인 평가시스템의 정비와 인식의 증대가 요구됨 나아가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거점 역할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과 인정이 되어야 함

### 대안제시

사회복지관 개소에 대한 사례관리 거점센터 지정 및 시스템 구축으로 사례관리 전문인력 개발과 교육 자원망 개발 안정추진 대상자 의뢰와 연계 개입의 안정성 등이 지속 가능하도록 함



## □ 재단으로 이관된 직능단체 보조금 경기도로 환원

### 필요성

경기복지재단은 복지프로그램 개발 보급 복지시설 평가 및 지표개발 복지시설 인증의 시설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사 연구와 시설종사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등의 역할을 할 목적으로      년도 말에 출범됐다 더불어 복지건강국의 사회복지 직능단체의 소관 민간경상보조사업 개 단체 개 사업이 일부재단에 이관되었다 이관절차는 초기단계부터 경기도 직능단체들과의 사전 협의 절차도 없이 진행되어 진통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역할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기존의 민간단체와 마찰이 우려되어 사뭇 옥상 옥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재단은 직능단체와의 사업과 기능의 중첩 재단과도 사이의 전달체계 문제 보조금 지원기관에 따른 수직구조 등 문제점들이 돌출되고 있다 또한 재단의 사업과 예산의 규모는 확연하게 증가하였으나 직능단체 대다수가 수년간 보조금이 동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업총량을 늘려나가기엔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부터는 재단에서 보조금을 받는 직능단체 등을 대상으로 사업평가를 한다고 하니 전체 직능단체 사업이 재단으로 이관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를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사업비의 일부만 재단에서 지원받고 나머지는 도에서 보조금을 받는 형태의 직능단체의 경우 어떻게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지 의문이다

### 현황 및 문제점

년도 재단이 출범되면서 복지건강국의 예산 중 표 과 같이 노인복지사업 개 사회정책분야 개 장애인분야 개 사업 등 개의 민간경상보조사업이 재단에 이관되었다 출범 이래 재단이 단순 직능단체 보조금 지원단체로서 뿐만 아니라 그 역할과 기능에 있어서도 마찰을 빚고 있다

직능단체가 오랫동안 진행해왔던 사회복지 종사자 교육훈련 조사 연구 각종 복지사업을 중복적으로 진행해오고 있다 특히 교육훈련사업에 있어서는 다수의 교육을 위탁교육으로 진행함 따라 기존 직능단체의 경우 예산문제로 재단 공모사업 통해 지원받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복지 직능단체가 민간네트워크의 대표라 할 수 있으나 재단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민을 대변하는 측면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보조금은 재단으로부터 지원받고 있으나 실질적인 사업논의나 추진은 도와 진행됨에 따라 이중적인 네트워크 구조로 사업의 효율성이 저하된다

표 에 의하면 단체별로 적게는 소액 단위사업부터 많게는 단체별 보조금 전액을 재단에서 교부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재단에 사회복지 직능단체 전체를 포괄하거나 다시 도의 해당부서로 이관하는 일원화가 필요하다 또한 재단으로 이관된 이후 계속되는 보조금동결로 인하여 최소한의 물가상승률에 대한 반영이 필요하다

또한 다음과 같이 전국의 몇몇 유사 복지재단의 기능들을 비교하여 볼 때 경기복지재단만이 사회복지단체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출범일	기능 및 역할
서울복지재단		종사자교육훈련 복지시설인증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복지시설평가 희망드림 사업
부산복지개발원		연구 및 정책개발 인적자원개발 및 지원 사회복지시설평가 및 심사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교류지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복지정책 모니터링 연구조사사업 및 구축 시설의 평가 인증 및 컨설팅 무한돌봄사업 전문복지인력양성 <b>사회복지단체활성화 보조금지원</b>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복지정책개발 인적자원개발 복지정책총괄 보육정보 및 서비스제공 복지서비스인증

경기복지재단보다 먼저 출범한 서울복지재단의 경우 초창기에 서울시 복지여성국의 업무인 사회복지시설 기관에 대한 보조금 산정 및 지급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일선 현장 종사자들이 단합된 모습으로 기자회견 진군대회 현수막 부착 일인시위 심지어 시간 릴레이 단식투쟁을 강행하면서 대규모 항의 집회를 여는 등 우여곡절 끝에 서울복지재단사업에서 다시 시로 환원된 것으로 알고 있다

### 대안제시

재단으로 이관된 경기도 직능단체 보조금 도로 환원 장기적으로 동결된 사회복지 직능단체 예산의 현실화 사업의 중복성을 해소하기 위해 수직적 논의구조가 아닌 수평적 논의구조가

필요

직능단체와의 중복사업을 배제하고 재단의 고유사업만을 육성 필요  
 정책연구 사회복지종사자처우개선을 위한 공제회 복지자원연계 네트워크 등  
 관주도가 아닌 민 관의 네트워크 중심에서 구심점 역할 필요

표 경기복지재단 사회복지단체 지원예산

	단체명	사업명	년예산 천원
총계 개단체 개사업			
사회복지분야 개단체 개사업 소계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도 푸드뱅크 운영	
		사회복지주간 사업비 지원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육성 지원	
		사회복지 실무자 교육훈련 사업	
		사회복지정보센터사업 운영	
	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	사회복지관 종사자 연수교육	
노인복지분야 개단체 개사업 소계			
	경기도노인복지시설연합회	경기실버인력뱅크 지원	
		사회적기업 육성 기반 조성	
		실버인력뱅크 관리자 교육	
		은빛사랑 나눔단 운영지원 광역	
		노인복지상담실 운영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지원	
		세 이상 장수노인 기념품 지원	
	치매미술치료협회	치매노인 건강프로그램	
장애인복지분야 개단체 개 사업 소계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재가장애인 사회적응 훈련	
		재가장애인 사회적응 훈련 청	
		장애인 재활정보통신망 운영	
		장애인 재택고용사업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	장애인 후원결연사업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재활프로그램 평가발표회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장애인 생산품 품질인증제 도입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경기도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지원	
	전국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참가	
	장애인 종합민원상담 센터	
	장애인 종합민원상담 센터 북부	
	종합민원 상담용 차량운영 지원	
	장애인고용 촉진 워크숍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심부름센터 지원본부 운영	
	시각장애인 점자교실 운영	
	점자 소식지 녹음테이프 제작	
	시각장애인 문화체험교실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제공	
경기도농아인협회	농아인 통신중계서비스센터 운영	
	수화통역센터 지원본부 운영	
	청각 언어장애인 수화교실 운영	
	농아가정어린이집 운영	
	청각 언어장애인 직업재활센터운영	
경기도장애인복지회	장애인 결혼상담센터 운영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경기도장애인부모회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	
경기도교통장애인협회	교통사고예방 캠페인 및 사진전시회	
경기도신장장애인협회	신장장애인 지원센터 운영	
행복한동행	장애인 직업개발연구센터 운영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장애인 보조견 훈련사업 훈련 사업	
경기도장애인정보화협회	장애인정보화 보조기기 보급사업	
경기도신체장애인복지회	사랑의 끈 연결고리 운동	
경기재활봉사대	장애인 재활승마 운영	

## □ 사회복지전문가 양성체계 구축 및 지원

### 필요성

다변하는 현대사회에 국민의 삶에 가장 근접하게 또한 다각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전문가는 사회복지사가 유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그에 필요한 보수교육을 개인의 의지에만 국한하고 있으므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적 단계적 체계적 교육시스템이 요구됨

사회복지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만큼 그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지속적으로 습득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필수적임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은 교육의 기회를 갈구하고 있으나 정책적 환경적 재정적인 압박으로 교육의 기회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 현황 및 문제점

자격증 취득 후 별도의 보수교육을 받은 정도를 경기도내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장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중 약 10%의 경우가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재상

철저히 개인적 선택에 의해서만 교육이 이루어짐

학교교육과 현장의 실무와의 괴리감으로 인해 많은 이직률이 발생하고 있음

단계별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의 도입으로 학교교육 이론 외의 실무에 대한 접촉의 기회가 없음

사회복지에 대한 새로운 이론과 기술 등을 지속적으로 접목함으로써 지역사회는 물론 국가의 복지발전을 꾀할 수 있으나 그 중요도에 비해 정부 및 지방정부에 대한 인식이 매우 결여되어 있음

수혜자에게 퍼주기 식의 재정낭비가 아니라 유효적절한 서비스와 다각적인 서비스가 제공됨으로써 적은 예산으로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를 보다 전문적으로 양성해야 함을 인식해야 함 공무원도 정기적으로 필요한 연수를 시행하고 있음

누구나 그 직무에 대한 효과를 상승하기 위해 정기적인 교육은 이루어져야 함

년도 경기도내 사회복지자격증 소지자 총 1,200명 중 보수교육 신청은

1,000명이 신청하였고 이중 500명이 이수함

천여명 중 약 500명은 자비로 교육비를 부담하고 500명은 기관 시설에서

부담함 지역별 또는 기관별로 차이가 큼

## 대안제시

서울시와 인천시 제주도는        년부터 사회복지사 법정보수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음 또한 경기도내 성남시에서도 지원함에 따라 교육비지원을 경기도내 사회복지사 전체로의 확대가 요구됨

또한 연간 의무적으로 시간만 받게 되어 있는 법정보수교육은 보다 깊이 있는 교육으로 구성하기에 시간이 부족함에 따라 본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진행하는 미취업과정 신입과정 경력과정 중간관리자과정 관리자과정의 형식으로 단계별로 맞춤형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비 예산지원이 요구됨

열악한 현장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경우 교육이 있어도 자신의 직무상 자리를 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보조인력지원 등 현실적 대처가 뒷받침 되어야 함

# VI. 노숙인분야

노숙인시설 인프라 확충

주거복지 경기도민 노숙인 에 대한 최소한의 주거권확보

운영지원의 현실화

노숙인 자활지원을 위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가 수립되어야 한다

## □ 노숙인시설 인프라 확충

### 필요성

집이 없는 사람 인 노숙인들의 복지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  
노숙인은 년 국가부도위기 이후 실직 가족해체 개인파산 등으로 거리로 떠밀려진 사람들이다 국가의 복지제도와 민간 사회안전망이 이들을 돌봐야 하는 건 당연한 실정이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노숙인들은 물론 우리사회에 사는 모든 사회적 약자들에게 돌봄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복지분야 중 노숙인부분은 부정적 사회적 인식과 더불어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듯한 현상이다 이에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복지 인프라가 구성되어야 한다

### 현황 및 문제점

노숙인 복지에 대한 정부당국과 정치권의 외면은 열악한 복지 현실을 낳고 있다 거리와 쉼터에 거주하는 노숙인들의 현실을 보면

거리에서의 비위생적인 무료급식 배급

잦은 실직으로 인한 노숙 생활 반복

쉼터의 주거환경 열악

반인권적인 폭력에 노출

노숙인 가 결핵이나 간염 등 각종 질병 보유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 등 취약한 생존환경에 처해져 있다

특히 노숙인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 선정에 있어서 생계비 보조는커녕 의료보호대상자로 선정되기조차 어려워졌다 따라서 노숙인들은 높은 질병 보유율에 비해 턱없이 낮은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다

인도주의의사실천협의회에 따르면 년부터 년까지 월별로 노숙인 객사를 조사한 결과 월 평균 명이 거리에서 죽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더구나 행려병자로 분류돼 의료기관으로 후송된 뒤 사망한 경우까지 포함한 전체 노숙인 사망자수는 최근 년동안 총 명에 이르렀다 조사 실시 기간이 오래 지난 현재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다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에 대한 책임이 지방정부로 이양됨에 따른 개별 지역사회복지 기관 및 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은 크게 약화되고 있으며 서비스 수혜계층이 한



곳에 편중되어 있거나 지역별로 불균등하게 되어 있다 이것은 수혜계층의 접근성과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용권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볼 수 가 있다

표 경기도 노숙인 시설 및 거리 노숙인 현황

현재 단위 명

시설명	입소 정원 및 이용자 수	비고 거리노숙인 현황
형제의 집		수원
해뜨는 집		
희망의 집		
새희망의 집		
주거지원 센터		
행복찾기		
행복한 집		
다시서기지원센터		
성남내일을여는집		성남
하사함의집		
상담보호센터 응급잠자리		
희망사랑방		안양
실로암쉼터		부천
노숙인상담센터 응급잠자리	남 여	의정부

### 대안제시

자율주거 취업알선 의료지원 급식지원이 원스톱으로 지원될 수 있는 종합적인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 일본의 아이링센터

무료급식소를 실내급식소로 전환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먹는 문제에 앞서 자존감의 향상은 자활에 기초이다

드롭인상담센터를 보강해야 한다

지금의 약식의 상담센터가 아니라 보건복지부 및 서울 기준의 정상화된 상담센터의 운영이 필요하다

노숙인쉼터의 모든 운영체제를 보건복지부 생활시설 기준에 맞춰서 지원되어야 한다

종사자적정인원보강 인건비의 정상적인 지원 운영비등 거리노숙인을 위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한다

인문학강좌 자활프로그램공공기관연결 주거지원등

노숙인쉼터 신고시설등록을 위한 기능보강에 민간차원 뿐 아니라 경기도가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양성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주거복지-경기도민(노숙인)에 대한 최소한의 주거권 확보

### 필요성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실시하는 국민임대아파트인 경우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 임대아파트를 신청할 경우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있다. 우선공급 대상자인 장애인 노부모부가족 중소기업 근로자 소년소녀 가장 간이공장 사업 근로자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개인이 자활 자립하여 새로운 주거지를 마련하고자 하더라도 일반인들과 똑같은 당첨 조건이고 소득에 제한이 있으며 임대료 월 1만원 정도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주거지원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기리스타트 주거지원 센터는 한 지역에서만 국한되어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 수원 소재

### 현황 및 문제점

헌법 제 35조 항에 의하면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이는 지방자치를 실행하고 있는 지방자치정부의 의무이기도 하다.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우리는 법을 들어 표하지 않고 통칭 의 식 주라고 한다. 그만큼 사람의 기본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또는 사람의 기본권으로서 확실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밥먹고 옷입는 것 잠자는 것은 그러므로 곧 인권이다. 그러므로 홈리스 그야말로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집을 주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며 인권의 한 부분이다.

우리는 흔히 의식주의 해결을 인권의 가장 최하위 개념으로 말하고 있다. 이에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표출 출산 교육 가정 문화 하여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산출하는 주거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방정부의 정책적 개입과 의지가 필요하다. 매년 경기도시공사를 통하여 전세임대사업 재건축매입임대 등 주거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는 극히 비현실적이고 생색내기에 그친 아주 미흡한 것에 불과하다. 이에 보금자리주택 시프트등 이러한 것들이 제 기능을 다하고 있지는 않지만 의미상으로는 현실화되고 서민화된 주거정책이 적극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도민 노숙인의 주거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도입이 필요하다. 특

히 집이 없어 떠돌아 다니고 사회문제로 비화되는 일이 없도록 노숙인등에게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주거정책이 펼쳐져야 한다

### **대안제시**

경기도 차원의 노숙인주거복지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

경기도에 주거임대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위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뉴타운 재개발등의 개발위주의 주거정책이 아니라 서민지향적이고 도민지향적인 실질적인 주거정책을 수립하라

노숙인등을 위하여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무상으로 공급하라

## □ 운영지원의 현실화

### 필요성

더 이상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복지는 수혜자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모두에게 이질적이고 피로감만 증폭되게 할 뿐이다 운영과 지원에 현실화를 통해서 보다 실제적이고 생산적인 복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노숙인시설은 타 복지시설과 비교할 때도 열악한 조건 속에서 운영되어 노숙인의 질적보호 차원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운영지원의 현실화는 그러한 차원에서 노숙인보호와 사회공적부조의 차원에서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에 노숙인시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

### 현황 및 문제점

사회복지현장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실무자의 처우는 공무원 및 다른 휴먼서비스 종사자에 비해서 낮은 편으로 이의 개선 필요 특히 자활지원 주거복지와 노숙인복지 등 일부 분야에서의 종사자들은 다른 복지분야에 비해서도 특히 낮은 처우 수준에 머물러 있어 서비스의 전문성과 충실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태임 생활시설과 이용시설 간 편차 등은 동일 노동 동일임금의 원리에도 위배

노숙인복지시설은      년부터 제도화되어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된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모든 행정적 규제와 조치는 사회복지시설에 준하여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종사원처우에 대해서는 예외적 적용을 받고 있다

**근속년수가 길어질 수록 타 사회복지시설과의 임금격차가 심함** 근속년수    년인 경우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사 기준 는      천원 노숙인복지시설 종사자는      천원으로 여만원이 적다 이런 임금의 격차로 인해 경기지역 노숙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평균 근속기간은    년으로 종사자들의 이직이 잦다

**호봉제를 적용하지 않아 신입직원이나    년 된 직원이 같은 임금지급** 경기도는 각 시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 노숙인 종사자 처우에 대해 실시하고 있으며 수원시 성남시는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고 안양시 부천시도 호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 경기도내 노숙인시설 종사자간에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타 시설처럼 호봉승급으로 인한 임금상승효과가 없다 또한 타 시설에서의 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경력자들이 노숙인시설로 신규 입사할 경우 신입직원의 급여를 받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소규모 시설의 경우    명이    시간 교대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시간외 수당과 연월차 휴가 등 최소한의 근로기준을 규정하고 하는 노동법상의 근로기준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

표 년 경기도 성남시 수원시 노숙인 보호시설 등 종사자 급여내역 연봉제

단위 원

직 종		구 분	년도 매 월별	
			급 여	복지수당
시 설 장		년 미만		
		년 이상		
상담원		년 미만		
		년 이상		
생활지도원		년 미만		
		년 이상		
취사원	입소자 인 이하	년 미만		
		년 이상		
	입소자 인 이상	년 미만		
		년 이상		

표 년 경기도 안양시 부천시 노숙인 보호시설 등 종사자 급여내역 호봉제

단위 원

직 종		구 분	년도 매 월별	
			급 여	복지수당
시 설 장		년 미만		
		년 이상		
상담원		년 미만		
		년 이상		
생활지도원		년 미만		
		년 이상		
취사원	입소자 인 이하	년 미만		
		년 이상		
	입소자 인 이상	년 미만		
		년 이상		

표 평균 급식비 및 의료비 산출

시설별	급식비 식 기준 평균	의료비
노숙인 쉼터		입소인원기준
타 시설 아동 노인		인기준

# 대안제시

년 각 생활시설 신고기준에 따른 기능보강 지원  
 개설편 각시설기준 평당건축비 원 원  
 시설운영지원

표 년대비대안예산안

		수원(5)	성남(2)	안양(1)	부천(1)	수원상담센터	성남상담센터	의정부상담센터	총액(경기도)
인건비	2010년예산액	289,240,000	139,815,450	74,101,760	91,101,860	107,500,000	64,896,310	74,607,000	841,262,380
	증액	294,290,500	174,815,450	74,101,760	91,101,860	120,000,000	82,462,960	80,318,280	917,090,810
	내역	호봉제	호봉제			호봉제	호봉제	호봉제	
	차액	5,050,500	35,000,000	-	-	12,500,000	17,566,650	5,711,280	75,828,430
	증액률(%)	1.75%	25.03%	0.00%	0.00%	11.63%	27.07%	7.66%	9.01%
급식비	2010년예산액	131,400,000	87,600,000	22,571,600	20,805,000				262,376,600
	증액	182,500,000	109,500,000	36,500,000	52,925,000				381,425,000
	내역	식*2500원*명	식*2500원*명	식*2500원*명	식*2500원*명				
	차액	51,100,000	21,900,000	13,928,400	32,120,000				119,048,400
	증액률(%)	38.89%	25.00%	61.71%	154.39%				45.37%
운영비	2010년예산액	48,000,000	36,000,000	15,000,000	18,000,000	7,800,000	3,520,000	12,120,000	140,440,000
	증액	90,000,000	45,000,000	18,000,000	18,000,000	18,000,000	3,520,000	12,120,000	204,640,000
	내역	운영전반	운영전반	운영전반		운영전반			
	차액	42,000,000	9,000,000	3,000,000	-	10,200,000	-	-	64,200,000
	증액률(%)	87.50%	25.00%	20.00%	0.00%	130.77%	0.00%	0.00%	45.71%
의료비	2010년예산액	12,007,920	42,796,800	6,060,000	1,800,000				62,664,720
	증액	12,007,920	42,796,800	6,060,000	4,000,000				64,864,720
	내역				의료지원				
	차액	-	-	-	2,200,000				2,200,000
	증액률(%)	0.00%	0.00%	0.00%	122.22%				3.51%
보호지원	2010년예산액	3,000,000	27,450,000	5,000,000	11,900,000	30,000,000	11,100,000	1,550,000	90,000,000
	증액	3,000,000	31,050,000	5,000,000	11,900,000	30,000,000	16,000,000	10,000,000	106,950,000
	내역		난방비등				난방비등	난방비등	
	차액	-	3,600,000	-	-	-	4,900,000	8,450,000	16,950,000
	증액률(%)	0.00%	13.11%	0.00%	0.00%	0.00%	44.14%	545.16%	18.83%
								2010년예산액	1,396,743,700
								증액	1,674,970,530
								차액	278,226,830
								증액률(%)	19.92%

## □ 노숙인 자활지원을 위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가 수립되어야 한다.

### 필요성

노숙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첫째는 밥이다 그렇지만 일면 표면적으로 볼 때 필요한 부분이고 더 깊이 들여다 보면 노숙인의 가장 큰 문제점과 바라는 바는 상실감의 회복이다 이는 사회적병폐의 한 방편으로 밀려난 우리사회의 아픈 부분을 회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의 도구가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은 큰 효과를 지닐 수 있다 이에 전인적인 노숙인 자활은 무엇보다도 정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 현황 및 문제점

리스타트 로 대표되는 노숙인 자활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은 긍정적이다 수 많은 노숙인들이 옹기나마 희망을 바라보았고 노래할 수 있었다 사람이 무엇인가 가능성이 있고 의욕을 갖게 하는 것은 사회를 밝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에 하나요 필수적인 요소일 것이다 이에 노숙인문제의 가장 핵심인 자활을 위한 방법과 제도도입 및 개선은 우리 사회를 밝게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좋은 방법과 의지만 가지고 자활을 꿈꾸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산재되어 있다 그래서 중복된 노숙생활과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자활사업에 모습이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는 한 자활을 위한 노력은 행정의 한계 자원의 한계 전문성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물거품처럼 사그라져 가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적극적인 자활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저소득층을 위한 자활지원방법 나아가 사회적기업과도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다

### 대안제시

노숙인자활지원조례를 수립하여야 한다

노숙인자활지원체제를 보강해야 한다

지자체의 저소득자활사업에 적극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노숙인자활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효율적 방안을 제고해야 한다

## VII. 자활분야

자활공동체 또는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예산 확보

지역자활센터 기본시설 지원

지역특색에 맞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가칭 사회적일자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빈곤계층 자활지원을 위한 자활교육센터 설립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충

취약계층 근로여성을 위한 공공보육시설 확대

국 공립 노인요양시설 확대 및 저소득층 요양비 지원



## □ 자활공동체 또는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예산 확보

### 필요성

자활공동체는 수급자 및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하여 탈빈곤을 위해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로서 국가로부터 인건비와 사업비를 지원받는 자활근로와는 달리 자체 경영을 통해 스스로 운영해 나가는 자활 자립의 직전 단계라고 할 수 있음

자활공동체에 대하여 정부에서 정한 지원내용은 사업자금 융자 국공유지 우선 임대 국가 또는 지자체 사업의 우선 위탁 생산품 우선 구매 인건비 지원 등이 있으나 지자체 차원에서는 유명무실하다고 말할 정도로 활성화 되어 있지 못함

또한 지자체 차원에서 자활사업을 위해 지원하는 내용은 자활기금을 활용한 전세자금 지원 이외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는 실정임

자활공동체 또는 자활기업은 지역에 근거하여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는데 비해 지자체 차원의 지원은 매우 부족하다 할 수 있으며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예산을 지자체에서 별도로 책정하기도 하는 것에 비해 자활공동체 또는 자활기업에 지원이 없는 것은 문제임

### 대안제시

자활공동체 또는 자활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예산 책정

광역지자체 산하 연구기관 등을 활용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자활공동체 또는 자활기업 사업 활성화에 대한 연구용역 수행

## □ 지역자활센터 기본시설 지원

### 필요성

지역자활센터는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또한 전국 개 지역자활센터는 시 군 구 지역 단위를 근거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역할의 중요성에 비해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시설지원은 부재하다 할 수 있음 이에 높은 임대료 부담 낮은 관공서 건물 임시 활용 등으로 효율적인 자활사업 수행에 애로사항이 존재함 일부 지역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 예산을 편성 지역자활센터 건물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더욱이 지역내 다른 사회복지시설은 기본적인 시설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에 비해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시설지원이 부재한 것은 국고 사업여부를 떠나 지자체 차원에서 제고하여야 할 사항임

### 대안제시

국 공유지 무상임대를 넘어서 지역자활센터 독자적 운영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예산 지원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매칭펀드 형태로 분담하여 지역자활 센터 기본 운영시설에 대한 예산지원 마련

## □ 지역특색에 맞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가칭 ‘사회적일자리지원센터’ 설치,운영]

### 필요성

우리사회는 지속적 경제난속에서 안정적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취약한 사회보장체계를 강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또한 우리사회는 시장에서의 일자리 창출이 일정 한계에 다다르고 있고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의 필요성 증대로 사회서비스의 공급확대가 필요하며 취업애로계층의 증가 등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업 고용비중은 로 회원국 평균수준인 에 비하면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임

바우처 형태로 진행되는 각각의 사회서비스사업 사회적기업지원사업 다양한 사회적일자리 사업 등을 담당하는 지자체의 부서가 각기 달라 사업집행에 있어서 일관성의 부족 중복성 등의 문제를 지자체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사회서비스 사업을 관리하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색에 맞는 사회서비스 사회적일자리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역의 일자리 문제 해소와 대주민 공공서비스 확충이라는 관점에서 사회서비스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함

### 대안제시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민 관 협의체 성격으로 가칭 사회적일자리지원센터 설립 운영 또는 사회서비스 지원센터

사회적일자리지원센터 담당 공무원 또는 담당 부서 설치

센터 부설로 사회적일자리 연구센터 또는 사회서비스 연구센터를 두어 지원 내용 마련과 지역특색에 맞는 사업개발

## □ 빈곤계층 자활지원을 위한 ‘자활교육센터’ 설립

### 필요성

년 자활사업이 시행된 이래 년간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수는 급격히 향상되었는데 지역자활센터가 개로 지정이 완료된 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명 정도에서 년 명 수준으로 약 배정도 확대되었으며 년도에는 배 정도 늘어난 명 정도의 참여를 계획하고 있음

참여주민의 수가 늘어나면서 자활사업의 질적인 면을 담보하기 위해 단편적인 사업 중심에서 벗어나 점진적으로 자활사업 참여주민에 대한 맞춤형 교육서비스가 요구되어지는데 반해 지역적으로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교육시설이 부재한 형편임

또한 수급자등 자활사업 참여자뿐만이 아니라 지역 내 근로빈곤층을 포괄하여 소양교육 인성교육 기능교육 자격증교육 취업 및 창업교육 등으로 취업을 촉진하고 자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자활사업 참여주민과 지역 내 근로빈곤층에게 맞는 전문 교육시설의 설치가 요구되어짐

### 대안제시

자활사업 참여주민 및 지역 내 근로빈곤층의 자립촉진을 위해 광역지자체별로 가칭 자활교육센터 설립 운영

이와 더불어 기초지자체별 자활교육장 마련하여 자활교육센터와 연계 운영

## □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필요성

우리사회에서 높은 주택가격은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이며 주택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는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없는 실정일뿐더러 주거에 있어 서양극화 현상은 개선의 여지가 높지 않은 실정임

수급자 등 저소득층은 주거환경의 열악함과 불안정성으로 빈곤을 탈피하여 일반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선으로 영국 독일 등 내외의 수준에 있는 서구국가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형편임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 서울의 경우처럼 임대주택 신청에 의 경쟁률이 나타나기도 하고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에서 탈락 되면 공공임대주택의 부족에 따른 다수의 대기자로 인해 임대료 인상 등 직 간접적 퇴거압력을 받고 있기도 함 또한 대한주택공사의 공동임대주택 임대료 체납현황에 따르면 년 말 기준 공공임대주택 만 가주 중 만 가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는 형편임

주택은 사회구성의 기본요소인 가족의 주거생활을 제공하는 공간이므로 국가적인 관심이 필요함 그러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더 이상 중앙정부에만 의존해서는 곤란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공공임대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대안제시

장기공공임대주택 확충을 중심으로 공동임대주택이 전체 주택재고의 에 단계적으로 이르도록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역할이 필요함

주거급여 및 임대료 보조 전세자금 지원 임대보증금 용자 등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 지원제도 실시

##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 필요성

국가사업인 사회복지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가 낮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임      년 기준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호봉 기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평균임금은 월      만원으로 공공 및 사회복지부분 전산업 종사자 평균임금 대비      수준임

이로인해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생계의 어려움으로 이직율이 높고 경력있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가 용이하지 않아 전반적으로 질높은 사회복지서비스를 담보하기가 어려움

특히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들은 빈곤층 주민들의 자활 자립을 지원하는 특수한 역할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시설등 전체 사회복지시설종사자 평균연봉      천원의      수준인      천원에 그치고 있음

이에 정부 급여체계 안에서 제외된 사회복지시설 취약분야 종사자들과 직능단체별 차등에 대한 차별 없는 급여지급 체계가 마련되어질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 대안제시

지자체 차원에서 공무원 임금체계에 준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체계를 단일 임금체계로 현실화 하여야 함

사회복지종사자들에 대한 의료공제나 상해보험마련등 건강권 확보를 위한 지자체 재정지원 마련

지역자활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중에서도 열악한 처우에 있는 종사자들을 위해 지자체에서 각종 수당을 신설하여 처우를 개선하여야 함

##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충

### 필요성

사회복지는 대주민 서비스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비해 수급 권자 담당가구 수 인당 약 가구를 포함하여 복지담당 공무원 명이 평균 명 국민일보 년 월의 주민을 맡고 있을 정도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수의 부족 문제가 심각한 실정임

이는 일본의 가구 등과 비교했을 때 일상적인 복지업무 뿐만 아니라 일선의 사회복지서비스를 담당할 수 없음 결국 이로 인한 업무량 과다 등으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들의 사기저하 및 정체성 상실 등이 우려되는 실정임

또한 사회복지 분야는 갈수록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지고 있고 사업량도 늘어나고 있으며 보다 전문화된 영역으로서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사회복지 분야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전담할 수 있도록 확충되어야 하며 욕구가 있는 지역주민에 대하여 초기상담 및 기초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대안제시

주민자치센터 및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점진적으로 배수로 확충

상담 및 사례관리 복지전담 공무원을 주민자치센터와 기초지자체에 전담 추가 배치

## □ 취약계층 근로여성을 위한 공공보육시설 확대

### 필요성

전국 만 천 백여 개의 보육시설 중 국 공립 보육시설은 천 백 십여 개로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년 기준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은 여명으로 이중 인 여 명만이 국 공립 보육시설을 이용 년 말 보건복지부자료 하고 있음

지난 년 동안 국 공립 보육시설은 배 증가한 반면 민간 보육시설은 배까지 증가하여 국 공립 보육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감소함 또한 국공립 시설에 대한 보호자의 신뢰가 높아 현실적인 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나 년 말 기준 국공립 보육시설 입소 대기자 수는 약 만 명에 이르고 있는 실정임

특히 저소득 취약계층의 보육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빈곤이 악순환되는 구조에 처해 있으며 취약계층 지역에 국 공립 보육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상당기간 대기하거나 원거리로 보내는 등 보육에 따른 어려움으로 인해 일하고자 하는 취약계층 근로여성이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됨

### 대안제시

지역 내 국 공립 보육시설을 보육사업에서 공공영역이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전체 보육시설 대비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충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지역에 우선적으로 국 공립 보육시설 설치 취약계층 근로여성을 위한 시간 연장 방과 후 보육 등 국 공립 보육 시설 운영방식 개선



## □ 국·공립 노인요양시설 확대 및 저소득층 요양비 지원

### 필요성

국민건강보험공단      년 월 말 자료에 의하면 전국 요양기관은 시설이      곳 재가 서비스기관이      곳이고 대부분 영리법인이나 개인이 운영하고 있음 그중 요양시설은      인 곳 만인 지방자치단체 곳 나 사회복지법인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공공시설 이라고 할 수 있음

이렇듯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수행하는 민간영리단체가 폭증하고 있으나 노인의 건강 및 요양 욕구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장경쟁체계에 맡기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함 따라서 질 높은 요양 서비스를 위해서는 요양서비스 기관의 국 공립화를 추진할 필요가 존재하며 또한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 간의 요양인프라의 지역 간 차별 등으로 인한 서비스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보다 책임성 있는 서비스를 위해서는 노인요양시설의 국 공립화를 추진하여야 함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자발적 중도 탈락자의      가 본인부담금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는 연구결과가 말해주듯 재가요양      시설요양      로 규정된 본인부담율은 매우 높은 수준임 이는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인 차상위계층의 상대적 상실감이 커져 국가제도의 미 수혜자로 남아있는 형국이며 이의 보완장치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고 있기도 함

### 대안제시

국 공립 전문 노인요양시설 확대 및 장기요양기관 설치 운영  
저소득계층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전액 또는 일부지원

## VII. 보육분야

경기도 공보육 활성화를 위한 저소득층 차액보육료 지원

경기도내 보육시설 인허가 관련한 기준조례안 제정

경기도 가정보육교사제도 개선

## □ 경기도 공보육 활성화를 위한 저소득층 차액보육료 지원

### 필요성

적정 보육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연구한 표준보육비용 표준보육비용 연구 보건복지가족부에 부합하는 보육료 산출이 필요하며 공보육 실현을 위해서는 지원시설 국공립보육시설 과 미지원시설 간 보육료 부모부담 부분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

영아의 경우 영아기본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영아보육료의 일정부분을 지원하여 지원시설의 영아보육료와 미지원시설의 영아보육료를 동일하게 책정하고 있다

하지만 유아의 경우는 별도 기본보조금이 없어 지원 국공립 시설 보육료와 미지원보육시설 보육료가 최소 원 이상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경기도 전체 보육시설의 정원대비 현원의 비율이 에도 못 미치는 현실 속에서도 지원시설의 입소 대기자수는 년 말 기준 약 만명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보호자가 만족할 만한 적정수준의 보육서비스 질을 확보하며 보육료의 부모부담부분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유아기본보조금 도입이 필요하며 일차적으로는 저소득층 가정 유아의 보호자 보육비용 부담분이 지원시설 수준으로 일치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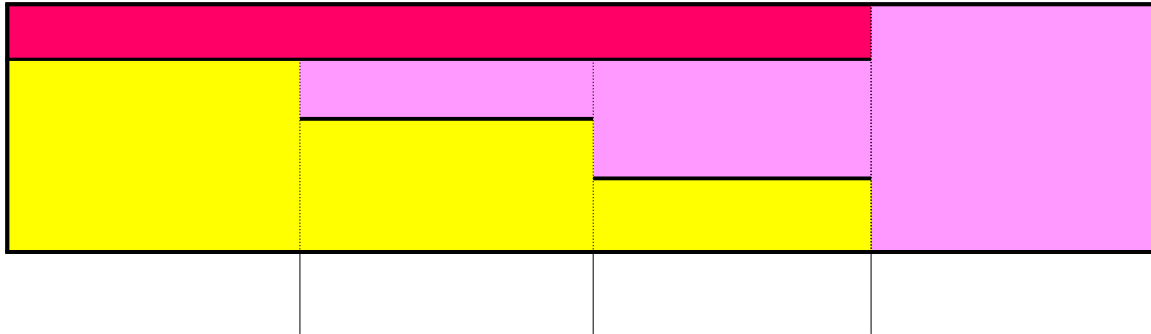
따라서 미지원시설을 이용하는 저소득층 가정의 유아 보육료 부담수준만이라도 지원시설 보육료 부담수준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그 차액분을 경기도에서 해당 유아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현황 및 문제점

정부미지원시설을 이용하는 유아 세의 부모는 정부지원시설 인건비지원 시설 등 보육료단가를 초과한 보육료 월 평균 원 이상 를 추가 부담하고 있으며

지침에 의해 추가보육료를 받지 않도록 규정된 층 기초생활수급자 을 제외한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저소득층 영유아의 부모들 또한 지원시설 이용 학부모들에 비해 월 평균 원 이상의 보육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실정이다

### 유아차등보육료 현황



### 대안제시

경기도내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이 이하 가구 자녀 중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만 세 세아 초등학교 취학전 를 대상으로 연령별 차등보육료 지원 기준인 정부지원시설 단가와 민간시설 단가의 차액을 지원해야 한다

연령별	이용시설별 차액 지원단가		비고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세			
세이상			

## □ 경기도내 보육시설 인허가 관련한 기준조례안 제정

### 필요성

영유아보육법 제 조 시행령 제 조 시행규칙 제 조 항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육시설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될 수 있도록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육시설 수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보육시설이 난립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를 인가 시 판단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국 보육시설의 가량이 밀집되어있고 년도 말 기준으로 보육시설의 정원대비 현원 보육아동비율이 에 불과한 경기도의 경우 시설의 난립보다는 기존시설들의 보육서비스 질과 학부모들의 시설이용 만족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근거가 될 보육지원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이 넓게 혼재되어있는 지역특성을 반영해 보육시설 인허가와 관련한 탄력적 규제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현황 및 문제점

경기도내 보육시설이 년도 말 기준 개소이던 것이 년도 말에는 개소에서 년도 말에는 개소로 증가하였고 년도 말 기준으로는 개소로 일만개 시설을 넘어서게 되었으며 최근 년간 약 이 상의 급격한 시설증가율을 보였다

이미 관내 보육시설 공급은 포화상태를 넘어섰음에도 지속적으로 신규 보육시설의 진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무분별한 신생 보육시설의 난립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와 이를 관리 감독하는 행정비용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보육현장은 정원에 훨씬 못 미치는 현원율로 운영난이 심각한 상태이며 보육시설 수 증가에 따른 보육예산의 불필요한 확대와 보육 지원의 비효율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 대안제시

매년 관내 개 시군 보육수요 및 시설 수에 대한 명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보육시설 인허가 계획을 수립 할 수 있도록 해당 보육지원조례에 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경기도내 보육시설의 인허가시 보육시설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적정 수준의 균등한 보육서비스 질 확보를 위해 신생 보육시설의 설립기준 및 운영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 □ 경기도 가정보육교사제도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가정보육교사제도는 보육교사가 보육아동의 집에 방문하여 보육하는 제도로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을 표방하고 있으며 본제도와 관련하여 올해 개 가정 수를 기준으로 억이 넘는 예산이 배정되었고 가정보육교사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한 가정 당 약 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 가정에서 보육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이라고 하는 것은 영유아들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성인중심의 편의주의적인 사고에 기인할 수 있다 관리감독자의 부재와 고립된 환경은 영유아의 안정성 및 사회성을 보장받지 못할뿐더러 보육이라 함은 보호와 교육을 합친 개념이기에 영유아의 발달과정에 맞춘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보육프로그램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당해 제도 하에서 이런 부분이 제대로 충족될지 여부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또한 가정보육교사의 보육 시 관리 감독자의 부재는 보육 중 문제발생에 따른 책임 귀속의 문제가 뒤따르고 고용주와 피고용주간의 관계가 불명확하여 가정보육교사에 대한 처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가정보육교사제도의 시행과 관련한 가장 큰 사회적 논란은 예산 집행의 형평성부분이다 관련한 경기도 지원부분과는 별도로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보육비용은 최소 만원을 훨씬 웃도는 점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당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가정은 상위 소득계층이며 실질적으로도 당해 제도의 주 수혜자는 월수입 만원 이상의 고소득 부모의 아동들이다

또한 가정보육교사들의 활동지원금 명목으로 경기도가 지원하고 있는 교사 처우개선비 등 교사 인당 만원 만원은 보육시설에서 다수 아동을 종일 보육하고 있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와 같은 수준으로 이는 지원의 효율성과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다

보육관련 지원예산은 보육비용 지출이 생계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여 보육 부담이 막대한 저소득 가정에 우선적으로 배정되어야하며 급여수준과 근무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일반 보육교사의 인건비지원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 대안제시

현재 경기도는 가정보육교사제도와 관련한 법제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법제화의 핵심사항은 가정보육교사의 보육경력 인정에 관한 부분이다

보육경력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 자격을 취득하고 시설에 근무하면서 슈퍼바이저 상위 지도 감독자로부터 철저한 지도 및 관리 감독 하에 체계적인 보육수행을 지도받아 보육 노하우와 교수능력을 습득하고 다양한 특성을 가진 여러 영유아들을 접하며 각각의 발달단계 적합한 보육을 실행해 본 경력이 쌓여야만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일반 가정집에서 지도 감독자도 없이 명의 아이만을 보육하며 가사일과 보육일의 경계조차도 불분명한 근무행태를 띠는 교사로서의 교수능력마저도 확인할 길 없는 가정보육교사가 일반시설에서 근무한 교사들과 동등하게 그 경력을 인정받는 것은 보육의 전문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

당해 제도의 법제화 추진에 주력하기보다는 전염성 질환 등으로 불가피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영유아들을 위해 지역단위별 병아보육센터 설치와 보조교사 지원서비스로의 전환을 꾀해야 한다



## VIII. 시민연대 제안

근로빈곤층 생활임금 조례를 통한 경제민주주의 실현

혼선만 야기하는 지역복지 전달체계 정비

사회복지인력 시설종사자 의 처우 개선

노인 노인통합지원서비스로 전달체계 개선 및 사회안전망 확대

노인 세대 소통과 공감 문화공간으로 경로당 개선

청소년 학교사회복지서비스 활용을 통한 학교안전망 구축

청소년 지역사회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대

장애인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을 통해 취업률 획기적 향상

장애인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현실화와 경기도 자체 시스템 구축

아동 위 스타트 마을과 드림 스타트

센터의 통합관리

아동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대한 질적 제고

아동 아동양육시설의 기능전환

아동 아동복지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활성화

## □ 근로빈곤층 생활임금 조례를 통한 경제민주주의 실현

### 필요성

년 경제위기 이후 심화된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근로빈곤층을 양산하고 있다 상당 수의 근로빈곤층은 중앙정부가 설정한 최저임금 수준으로는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우며 이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제공되는 사회복지급여를 받아야만 생활이 가능하다 임금 수준이 적정수준에서 제공될 수 있다면 근로빈곤층은 스스로의 힘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추가적 사회복지 급여 제공에 필요한 예산과 관리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대안제시

근로빈곤층 기본 생활 보장을 위한 경기도차원의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요구한다 관련된 미국 사례를 보면 년 볼티모어시는 최초로 생활임금을 시 조례로 규정하였다 시간당 달러 최저임금을 보장한 것이다 이것은 당시 연방정부가 정한 시간당 달러보다 달러가 더 많은 액수이다 조례제정은 지역의 많은 단체들의 연대투쟁의 결과였다 년 이래 개 이이상 연대모임이 결성되어 요구운동을 지속하였으며 그 결과 개의 새로운 생활임금 조례가 만들어졌다 그후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로 확산되었다 연대운동조직은 건강보험 이민자 권리 생활임금 모니터링 등 다양한 영역으로 운동 관심을 넓여가고 있다 지역의 변화는 연방정부 차원의 개혁을 추진하여 년 선거에서 애리조나 등 개주 최저임금 시간당 달러 인상하는 국민발의안 투표 통과시켰으며 연방하원에서 년 월 회기에서 일내 최저임금액을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나아가 년 대선에서 보편적 건강보험 법안을 공약화하는 성과를 가져왔다 생활임금운동의 성과를 보면 대표적 경제정의운동으로 개 지방정부 명 저임금 노동자에게 혜택을 주었다 진보연합 결성 경제정의 의제를 공적 논의의 장으로 끌어들였다 경제정의문제가 국민운동으로 공적 논쟁의 핵심주장은 만약 최저임금이 기본 생활을 보장 못한다면 또 다른 공적 지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비효율적 재정 지출이 된다 이 문제 해결은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것이다 소득의 문제는 경제적 이슈이자 도덕적 이슈로서 임금

결정에는 시장의 원리에 더하여 정부의 개입 최저임금 생활임금 이 필요하다 지방의 변화가 중앙의 변화를 이끈다 생활임금 반대 세력도 있다 상공회의소 음식적 협회 언론 시장 소매상 등 실업초래 서비스 가격 상승 납부자 부담 증가 등 협박 관련된 실제 증거는 거의 없다 생활임금운동은 경제정의운동으로 확대 발전 생활임금조례 모니터링 최저임금 개선 아동 건강보험 프로그램 확산 등 경제정의운동으로 확산되었다

## □ 혼선만 야기하는 지역복지 전달체계 정비

### 현황 및 문제점

무한돌봄센타는 위기에 처한 가구에겐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의 새로운 전달체계라고 정의하고 있다. 무한돌봄사업을 통해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졌으나 사업내에서 발굴된 사례는 미만에 그치고 있고 위기가구에 대한 전문적인 사정 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문제인식에서 설치되었다. 다시 말해 무한돌봄사업은 지역내 긴급한 위기에 처한 개인과 가구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접근성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사례발굴과 적정성심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나 읍면동의 복지위원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 등 타기관의 상근인력을 비전담인력으로 부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상시적인 지원사업의 역할을 제한하며 전문적인 사례판정과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토대로 경기도는 무한돌봄센타를 경기도와 시군에 설치하였다.

기존 개별기관 단위의 사례관리는 지역사회 자원연계의 부족과 개별기관의 전문성만으로 제한되었으나 무한돌봄센타에서의 사례관리는 대상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고 연계하여 제공하는 사례관리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그러나 무한돌봄센타 설치과정에서 지역의 기존 인프라 지역사회 장애인 노인 복지관 및 청소년지원센터 건강가족지원센터 등의 역할과의 조정문제를 고려하였는지가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의 역할 중복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단위로 사회복지관련 공공과 민간의 주체 그리고 학계전문가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여 지역의 복지관련 사안에 대한 논의와 협의 추진 및 검토를 수행하는 구성체로서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복지계획을 수립하며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례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서비스의 중복 및 누락을 예방하기 위한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를 조성하는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년 월부터 구성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상근간사가 없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전달체계의 중복이며 이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예측할 수 있다.

## 대안제시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의 관계 정리 선행

무한돌봄센터는 경기도 내 개시 군에 설치되어 있고 향후 나머지 개시 군에도 설치될 계획이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경우 이미 개시 군에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적어도 개시 군에서의 사례관리나 지역자원과의 네트워크 기능 중복이 우려된다. 개의 무한돌봄센터가 운영되기 시작한 시간이 얼마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우려가 아직까지 표면화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는 충분히 발생가능한 상황이며 역할 분담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나머지 개시 군의 설치는 유보되어야 한다.

확대 설치 이전에 우선 무한돌봄센터의 운영 과정을 점검해야 한다. 운영 매뉴얼이 만들어지기는 하였지만 그 매뉴얼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세부 내용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다음으로 우려하는 것처럼 무한돌봄센터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간 기능 중복 더 나아가서 충돌이 발생한다면 두 기관간 관계 정리가 필요하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 조 의 근거를 둔 법정 단체인 만큼 이 기관을 해체하기는 어렵다. 또한 지방정부는 이 기관을 설치할 때의 목적에 부합되게 활성화할 의무도 가진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무한돌봄센터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간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조정은 필요하며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에 무한돌봄센터는 지역사회의 충분한 공감과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으로 제도화될 수 있을 것이다.

## □ 사회복지인력(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그동안 사회복지부문은 정부주도로 이루어지기보다는 민간영역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으며 특히 전문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사회적으로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해 온 것이 사실이다 최근 들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에 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업무의 특성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자들에게 직 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안정되고 만족스런 근무조건은 복지서비스 효과에 매우 중요한 요건이 되기 때문이다 경기도도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사회복지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한 경기도 사회복지사 공제회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공제회 추진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연기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중앙정부에서 사회복지사 공제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도가 먼저 공제회를 추진하여 성과를 보여주고 전국 단위의 공제회를 설립한 후 경기도 공제회를 흡수 통합시키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선례들을 볼 때 그 가능성은 희망적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즉 경기도

사업의 경우 큰 성과가 나타나면서 중앙정부는 이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새로운 이름 참여정부때에는 희망스타트 현 정부는 드림스타트를 걸고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정부는 위스타트사업과 드림스타트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어려움과 함께 일선현장에서는 추진 주체간 미묘한 갈등을 겪고 있다 둘째 경기도 사회복지사의 근무특성으로 인한 어려움이다 사회복지사 공제회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는 지방공무원공제회는 지방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규모의 경제와 이동이 잦은 지방공무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경기도 사회복지사의 근무실태를 분석한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사회복지사는 최초 진입은 경기도에서 하고 숙련된 이후에는 서울로 옮겨가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안정적 채용 및 회원 확보를 통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공제회 차원의 다양한 사업 추진은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 대안제시

우선 분야별 사회복지시설간 처우 수준을 동일하게 해야 한다. 상기 연구 및 사회복지협의회 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의 급여가 다르고 분야별 저소득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로도 차이가 있다 이는 한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쌓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분야별 시설유형별로 다른 처우 수준을 동일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처우수준이 다른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수당체계인 만큼 이를 동일하게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 노인 의제

### □ 노인통합지원서비스로 전달체계 개선 및 사회안전망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년 올해 경기도 세이상 노인인구가 만을 넘어서게 되며 이는 저소득 및 독거노인 등 특별한 대상을 위한 위기 발생 후 사후 개입적 노인복지에서 저소득을 포괄하는 보편적 서비스와 예방적 서비스로써 노인전체 집단을 위한 노인복지로 방향이 전환되어야 할 시점이다

특히 년 월 실시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복지영역에서 집중 서비스를 제공하였던 중풍치매 등 중증질환 노인들에 대한 서비스를 건강관리보험공단으로 이관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노인복지는 그 중심 대상을 질환을 가진 저소득 노인이 아닌 보다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노인을 대상으로 치료적이기 보다 예방적 시스템을 새로이 갖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대상 비율이 이고 경기도의 경우 서비스 미계약자와 등급불인정자 중 다른 복지 서비스 연계가 되지 않은 노인이 만명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경기개발연구원 노인복지비전 이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처럼 노인복지 관점의 전환을 위해서는 경기도 전체 노인들의 생활실태 및 복지 욕구를 파악해야 하고 경기노인 를 구축하여 노인들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며 관리해야 한다 현재 노인복지 서비스는 공급자 및 공급기관 중심으로 진행되며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 독거노인으로 노인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 기초노령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인 노인들 정도가 관리되고 있으나 이 대상을 제외한 대다수의 노인은 욕구조차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관리가 되고 있는 노인들 일지라도 각 관리주체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지 않음으로 해서 중복되거나 단절되는 문제를 함께 가지고 있다

따라서 통합사례관리를 위해서는 서비스 대상자의 욕구파악과 동시에 구축 각 기관의 정보를 공유하며 서비스 제공 기관과 서비스제공자들을 연계할 수 있는 통합적 시스템이 필요하다 구축 시에는 저소득 및 질환을 가진 노인뿐 아니라 건강하고 최근에 노인이 된 신규노인들을 중심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들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



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예방적 차원에서 신규 노인뿐만 아니라 향후 노인이 될 예비 노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로 이들이 노년기의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개인적 심리적 영역들의 종합적인 노년준비 교육과 지원서비스가 필요하며 이에 위해 경기도는 미래지향적인 노인복지 패러다임으로의 획기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 대안제시

**첫째** 경기도 노인 통합 사례관리를 위한 가 구축되어 경기도 전체 노인에 대한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가 파악되어야 한다

보편적 노인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편적인 경기도 노인에 대한 정확한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가 파악되어야 한다 따라서 경기도 노인 전체에 대한 광범위한 실태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구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담당자들이 지역사회 독거노인을 방문하여 구체적인 실태와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연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그 대상을 단계별로 전체 노인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노인돌보미 뿐 아니라 노인일자리 사업을 활용하여 인생선배로서 신규노인들을 지원하며 욕구에 맞는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사업확대에 따른 예산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역사회 노인과 관련된 서비스제공기관들의 정보를 공유하고 통합 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전달체계를 통합하여 개선하여 노인전문상담원 노인일자리사업담당자 노인기본서비스 관리자 노인돌보미가 통합되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노인돌보미 명 노인돌봄서비스관리자 명 노인전문상담원 명으로 확대한다

현재 지역사회에서 분절화 된 채 운영되고 있는 장기요양보험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노인재가복지서비스 노인여가서비스 노인일자리 및 취업관련 서비스 보건소의 치매예방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및 경기도 특화 노인자살예방 및 심리상담 서비스 등이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시군단위로 합의를 도출하여 세부적인 역할분담과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통합한다 만명 이상으로 서비스 대상 노인의 확대와 종합적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노인돌보미를 명에서 명으로 서비스 관리자는 명에

서 명으로 노인자살전문상담원을 명에서 명으로 확대한다 최근 전달 체계를 통합하여 종합적인 사례관리를 추진하기 위해 시군에 개소한 무한돌봄 센터나 지역복지협의체의 역할이 강화되어 통합서비스 제공의 컨트롤타워 기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셋째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명의 노인을 인생실버코치로 교육시켜 노인욕구 맞춤형 서비스와 노년준비교육 서비스로 일원화되고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면 이들을 통해 만명이상의 경기노인을 화하고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노인일자리 사업은 공급자 중심으로 진행되어 사회적 기여나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소모적인 형태로 추진되어 왔다 경기도는 고학력 노인들이 타 지역에 비하여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일자리에 참여시키고 종합적인 교육을 받도록 한 뒤 인생선배로서의 경험을 살려 신규노인들이 노년기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특별한 문제나 욕구를 가진 노인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 또는 연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노인들이 노인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인 진정한 노노 케어 및 노노 교육형의 시범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경기도에는 고학력 노인 중 자살위험 노인 발굴 및 관리 노노 상담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노인생명돌보미가 명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시군 노인자살전문상담원의 충분한 교육과 상담실습 지속적인 수퍼비전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넷째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노년적응 지원 프로그램인 으로 각각의 노인욕구에 맞는 맞춤형 실버코치들을 훈련시켜 지역으로 파견하는 새로운 개념의 노인일자리 제도를 시도한다**

단계의 복지코치는 만 세가 된 신규 노인을 방문하여 노인복지서비스를 안내하고 그들의 욕구 및 실태를 파악하여 화 한 후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단계 전문코치들은 파악된 노인들의 욕구에 맞춘 맞춤형 실버 코치들로서 최근 사별을 경험한 노인을 방문하여 정서적 안정 및 새로운 적응을 돕는 사별유경험자로 구성된 사랑코칭 우울하거나 자살위험이 있는 정서적 문제를

가진 노인을 위한 상담 전문 코치 **희망코칭** 취업이나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취업 진로상담 전문 코치 **열정코칭** 간단한 신체 활동을 포함한 운동 지도 및 여가활동을 지도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즐거운 친구인 **기쁨코칭** 혼자서 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노인을 위해 식사 및 세탁 청소 장보기 병원동행 등의 간단한 일상생활을 함께 해 줄 수 있는 든든한 코치 **나눔코칭** 장기요양 등급외자 이지만 신체수발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목욕 및 머리감기 등 신체수발 전문 코치 **돌봄코칭** 등 다양한 노인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전문코치들은 자신의 성향에 맞는 일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전문 교육을 받고 이를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즐겁게 사회 참여와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으므로 선순환 적인 구조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실버코치들의 역할이 활성화 된다면 지역사회 장애인이나 저소득 아동 등 다양한 도움이 필요한 대상으로 고학력 노인들의 실버인생코칭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현 황		⇒	향후 대안	
기존 서비스 대상 (독거노인 2만명 / 자살위험노인 1천명)		⇒	노인통합지원서비스 서비스 대상 (전체노인 30만명)	
자살 전문 상담원 (31명)	노인생명돌봄미 교육 및 수퍼비전 자살전문상담 진행 지역사회 내 자살예방교육 실시 지역사회 자살예방네트워크 구축	⇒	노인 전문 상담원 (100명)	노인돌봄미 및 실버코치 노인일자리 교육 및 수퍼비전 필요시 전문 심리상담 진행 지역사회 네트워크구축 및 전문교육 실시
		⇒	노인일자리 인생코칭 담당(50명)	노인일자리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 노인일자리 직무교육 및 행정관리 노인일자리 사업실적 보고
서비스관리자 (31명)	독거노인 DB 관리 독거노인 욕구에 따른 서비스 계획 독거노인 복지욕구에 따른 필요서비스 연계 및 조정 노인돌봄미 업무지원 및 복무관리 독거노인 생활교육 계획 수립 지역사회보건복지서비스 현황조사 시·군구에 사업실적 보고	⇒	노인돌봄 서비스 관리자 (100명)	경기 노인 DB 관리 노인의 욕구에 따른 서비스 계획 수립 노인의 복지욕구에 따른 필요서비스 연계 및 조정 노인돌봄미 업무지원 및 복무관리 노인 생활교육 계획 수립 지역사회보건복지서비스 현황조사 시·군구에 사업실적 보고
노인 돌봄미 (705명)	독거노인 20,916명 관리 안부확인 및 욕구파악 서비스연계 및 조정, 생활교육 지역사회보건복지서비스 현황조사	⇒	노인 돌봄미 (1,500명)	실버코치 150,000명 관리 서비스연계 및 조정, 생활교육 실버코칭 노인일자리 업무지원
노인생명 돌봄미 (400명)	자살위기 노인 발굴 및 심리검사 자살위기 노인 사례관리 노노상담 및 복지지원	⇒	인생코칭 노인 일자리 (15,000명)	노인 30만명 관리(1인당 20명) 안부확인 및 욕구파악 서비스연계 및 조정 맞춤형 전문영역 서비스 제공

## □ 세대 소통과 공감 - 문화공간으로 경로당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고령화 추세에 따라 생산가능 인구는 감소하고 피 부양 노인인구가 급증하므로써 노인부양비는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2017년에는 생산인구 1명이 노인 1.1명을 부양하였으나 2037년에는 1명이 노인 1.7명을 부양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같은 사실은 후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안겨주게 되며 노인세대와 젊은 세대간 갈등이 촉발될 우려가 있다 또한 가족구조가 핵가족으로 변화하면서 노인들과 함께 생활하는 젊은 세대와 노인세대간 이해가 부족하게 되고 서로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게 되어 세대간 갈등은 더욱 심각해 질 수 있다

그러나 이해와 공감의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이다 노인들은 수동적이고 받기만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사회에 기여하며 소통하고자하는 노력을 해야 하며 젊은 세대는 노인세대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우리 문화에서는 젊은 세대와 노인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의 공간을 만들어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이해받는 공감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통해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경기도는 지자체 중 가장 먼저 1인 1세이상 노인이 10만 명을 넘어서고 있고 경기도 노인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고학력의 건강한 노인들이 많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들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소통과 공감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미래지향적인 노인복지의 새로운 이슈는 경기도에서 실험되고 확산되어야 한다

경기도는 2017년 1월 기준으로 1,000개의 경로당이 설치되어 있지만 그 역할과 효용성이 매우 뒤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도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 그러나 서울 몇 개 지역에서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경로당을 활성화시킨 성공의 경험이 있다 경기도는 신규 아파트 단지가 대규모로 확대되고 있는데 노인인구가 거의 없는 신규 아파트 경로당은 텅텅 비어있는 상황이다 새로 지어진 아파트 내 경로당은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기에 아주 좋은 조건이다 주민들의 협력만 얻어내고 현실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서 공동화 되어 있는 아파트

내 경로당을 아파트내 커뮤니티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다 아파트내 커뮤니티 공간에서는 주민 어린이 유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특색에 맞게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의 사례에서 세대간 교육훈련센터 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노인과 아동이 함께 교육을 받는 곳으로 아동에게는 노인 에 대한 두려움 감소시키고 노화의 과정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노인에게는 아동을 통한 외로움 감소 기쁨을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센터이며 프로그램들은 한 방에 아동 성인이 비율로 참여하여 음악활동 미술활동 게임 활동 등을 함께 하는 것이다

### 대안제시

**첫째** 개 시군내 평균 곳의 경로당을 시범 거점 지역으로 선정하며 지역사회와 세대 간 통합을 위한 조직화 과정을 통해 경기도 내 총 개의 경로당을 소통과 공감 커뮤니티 공간으로 개선한다

이러한 소통과 공감 커뮤니티 경로당은 지역사회 통합과 세대간 통합을 위한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지역사회 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의 복지시설 지역 대학 주민 노인 등의 협력과 합의로 운영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조직화 해야한다 이러한 사업 추진 과정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민 교육 노인 교육 간담회 다양한 행사 등을 통해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여야 한다

**둘째** 중심 역할을 담당하는 실무인력으로 지역사회 사회복지사 명을 신규 채용하고 환경개선과 교육 등 운영에 필요한 예산 억 개소당 환경개선비 만원 프로그램 운영비 만원 을 지원한다

그동안의 경로당활성화 사업의 실패에서도 예를 보았듯이 이러한 모델은 적극적인 의지와 지원이 뒷받침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 업무를 전담하는 사업담당자를 채용하고 신규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모델사업에 참여할 지역주민들의 신청을 받아 협조를 얻어내고 지역주민대상 설명회와 교육 노인들의 역할에 대한 전문 교육 등을 통해 향후 자발적이며 독립적인 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노인조직을 조직화해야 한다 그동안의 형태 대로 복지관 사회복지사가 다른 업무의 하나로 맡는 형태가 아닌 조직화를 담

당할 경력직 지역사회 사회복지사를 채용하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조직화에 관련한 교육 등 운영비 개소 당 만원 와 경로당 구조 변경을 위한 경로당 환경개선 비용 개소 당 만원 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한다

**셋째 소통과 공감 커뮤니티 경로당의 형태는 교육형 공간활용형 보육형 의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교육형

직접 교육형 한자 서예 바둑 장기 전통악기 전통게임 등 노인 강사

연계 교육형 음악활동 미술활동 컴퓨터 교육 건강체조 등 강사 초청

공간활용형

방 및 교육

도서관 및 독서실형

카페형

스포츠센터형

보육형

어린이 방과후 교실 숙제지도 및 간식제공 학원 마중 및 배웅

놀이방 어린 아이들의 놀이방 및 구연동화 다양한 어린이교육 간식제공

**넷째 커뮤니티 경로당 운영 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지원하여 개소당 명 명의 노인일자리로 경기도 전체 명의 노인일자리를 확대한다**

커뮤니티 경로당 운영 형태와 관리방식은 지역주민과 노인 지역사회의 합의로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되 실제 관리는 지역 노인들이 실시하도록 한다 초기 관리 운영에 드는 노인 인건비는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지원하여 노인이 책임감있게 실제 커뮤니티 경로당 관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실비부담을 유도하여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자부담하여 자발적이며 독립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간다

표 시 군별 경로당 년 월말 기준

계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안산시		
용인시		
평택시		
광명시		
시흥시		
군포시		
화성시		
이천시		
김포시		
광주시		
안성시		
하남시		
의왕시		
오산시		
여주군		
양평군		
과천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파주시		
구리시		
포천시		
양주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 청소년 의제

### □ 학교사회복지서비스 활용을 통한 학교안전망 구축

청소년이 하루의 약 을 보내는 학교가 학습은 물론 삶의 장소로서 교육과 복지 기능을 동시에 담당하게 될 때 학교는 사회적 안전망의 큰 축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 현황 및 문제점

현재 학교에서는 빈곤 및 학교부적응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참조

사업주체	사업명	대상	실시학교 수 경기도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투자우선 지역지원사업	빈곤아동 청소년	여개 초 중학교
	위프로젝트	학교부적응 청소년	개 센터 교육청
	전문상담교사제도	모든 학생	개 년
기초자치단체	위스타트	빈곤아동 청소년	개
	학교사회복지사업	모든 아동 청소년	개

년 경기도 내 초 중 고 학생 수는 명 학교 수는 개임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위프로젝트 전문상담교사제도가 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 사업에서는 빈곤아동 청소년 초 중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복지 문화영역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위프로젝트사업에서는 교육청에 전문상담교사 사회복지사 등이 배치되어 학교 부적응 중 고 학생을 대상으로 상담과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에 상주 또는 교육청 상주 학교 순회형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주관하는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은 청소년 상담센터를 중심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위스타트 사업을 통해 빈곤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학교사회복지사업을 통해서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기초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학교사회복지서비스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선별적 복지서비스로서 빈곤 아동 청소년과 학교부적응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 결과 경기도 청소년 인구에 비해 서비스 소외 대상과 지역이 많다는 점이다

## 대안제시

###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경기도 조례 제정

현재 지방자치단체 지원 학교 중심 사회복지서비스는 과천시 년차 개교 용인시 년차 개교 에서 실시하고 있고 성남시는 년 조례를 제정하여 년 월 현재 개 학교에서 학교중심 사회복지서비스를 시작하고 있다 상기에 지적한 바 경기도 내 아동청소년 대상의 선별적 서비스에서 보편적 서비스로 확산되어야 하며 학교사회복지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소외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이 확산되고 경기도 차원에서는 도 조례 제정을 통해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대응투자 등의 방식으로 지원이 필요하다

□ **지역사회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대.**

**현황 및 문제점**

양극화 학교부적응 가정해체 등으로 가출 학업중단 폭력 등에 노출된 위기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청소년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상담 긴급구조 보호 의료 법률 학습 자활 지원 등의 종합 서비스가 필요하다 현재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을 운영하는 시 군은 개도 센터 개 년 개 신설 포함에 불과하며 쉼터 운영 시 군도 개소 그치고 있다

그 결과 위기청소년 발생수에 비해 위기 대처 예방할 수 있는 운영 센터 및 쉼터 수가 부족한 실정이다 설치된 운영센터의 경우에도 운영에 필요한 인력 등 예산 지원이 미흡하며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의 조정 및 통합 역할도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년 도내 위기청소년 통계 단위 명

구분	년	년	년 월	비고
학업중단				교육청자료
가출신고				경찰청자료
학교폭력				"
청소년범죄				"
자살				통계청자료

**대안제시**

시 군별 개의 운영센터 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예산 지원

위기청소년 집중 정서심리치료 바우처 실시

## 장애인의제

###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을 통해 취업을 획기적 향상 [장애인에게 도약의 기회를 !!]

#### 현황과 문제점

첫째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정책의 전달시기 및 자발성에 문제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급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성격을 국가들의 사업들과 비교하여 보면 자발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비교적 신속한 서비스 전달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장애인 직업훈련 서비스의 비자발적 성격을 완화하여 다소 의무적인 성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전반적인 확충 및 관련규정 재정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정책은 국가들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의무고용제와는 달리 장애인의 고용 후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전반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확충 과정에서 적격성 기준 서비스 전달시기 수혜정지 규정 등에 대해 정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도내 청년 및 고학력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 강화가 요구된다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부가가치적 성과가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표면적인 성과가 부진한 이유는 그 대상이 주로 연소 또는 저학력 장애인에 몰려 있기 때문인데 고학력 청년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을 전반적으로 확대하면 이러한 현상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도내 직업훈련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장애인은 장애인 전용 훈련기관에서도 직업훈련을 받지만 지역적 거리 접근상의 어려움 및 직종영역 제한 등의 문제로 인해 일반 직업훈련기관에서 훈련을 이수하기도 한다 이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율이 매우 미흡해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 대안제시

장애인 취업가능성 극대화를 위한 장애인력개발센터 설립

도내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재학 중인 장애학생 졸업 후 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전환교육 대폭 강화

도내 장애대학생을 위한 일대일 맞춤형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 실시

도내 공공 민간 직업훈련기관의 이동 및 편의시설 확충 개선 및 장애인 근 거리에 직업능력 개발 지원

## □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현실화와 경기도 자체 시스템 구축

### 현황 및 문제점

활동보조인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대표적 지역사회 서비스이며 장애인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원하는 생존적 권리이다 현재 전체 등록 장애인 만 명 중 약 급 등록 장애인의 약 에 해당되는 만 명에게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년 복지부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장애등급에 대한 재판정을 통한 신규 진입 제한과 기존 이용자 중 재판정을 통해 탈락자를 만들어 비용을 절감하고 이용자 본인의 자부담을 배에서 배 까지 높이면서 자부담으로 인한 활동보조서비스 사용을 위축시키거나 이용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 또한 전월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을 이월하여 쓸 수 없도록 만들고 있고 정부에서 시행하던 활동보조인 보수교육을 중계기관에 일방적으로 떠넘기고 있다

### 년 보건복지부지침개정 주요 내용

	기존	년 개정	비고
본인부담금	수급자 무료 차상위 월 만원 차상위초과 월 만원	차상위초과 가구소득과 서비스이용량에 따라 월 만 원 부과	서비스 포기사례 속출 노인요양보험방식으로 장애인장기요양제도를 만들기 위한 과정
장애등급심사	년 월 일부터 신규신청자에게 의무화	신규신청자 및 년이상 서비스이용자에게 실시	신규신청시 개월이상 서비스대기 등급이 하락되면 서비스 중단
서비스이월	바우처잔량 개월 이내 다음 달 바우처 생성	상반기는 개월 이내 하반기는 이월금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조치
보조인교육	교육시간 시간 교육비 만원 본인부담금 만원 보수교육 시간 전액 정부지원	교육시간 시간 교육비 만원 본인부담금 만원 보수교육 사업기관 자체교육 지원없음	예산절감을 위한 조치

경기도 내 등록 장애인 명 년 월 말 기준 중 급 장애인 수는 명이나 현재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 수는 명에 그치고 있고 년 활동보조 지원 예산 인원이 여명 밖에 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의 추가예산을 통한 생활시간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울산시의 경우 현재 월 최대 시간을 마산시 창원시 등 경상남도 개시의 경우도 월 최대 시간을 인천시의 경우에도 월 최대 시간을 보장하

고 있다 또한 급 장애인에게도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도가 있으며 활동보조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활동보조서비스는 급 장애인에게 한정하는 것은 예산 논리 이외에 어떠한 합당한 근거도 존재하지 않다 현재 마산시 창원시 등 경상남도 개시와 울산시 등은 급 장애인에게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동해시 대전시 인천시 등도 급 장애인에게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는 년부터 장애인생활도우미 사업을 통해 매년 억을 들여 초기에는 급 장애인에게 생활도우미를 파견하였으나 보건복지부에서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시작한 년 이후에는 급의 장애인에게 생활도우미를 파견하고 있다 장애인 단체에서는 매년 생활도우미 사업을 활동보조인서비스 사업에 포함시키고 보편적인 서비스로 전환 시킬 것을 요구하였지만 경기도는 자체 사업이라는 이유로 현재까지 지속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를 근거로 현재 활동보조를 받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추가 활동보조 시간을 이후로 미루고 있다

지자체 별 추가지원 현황 년 월 현재

구분		총사업비	대상자 선정기준	추가지원시간 매월		
시도	시군구	사업비 백만원		최소	최대	인당 평균
계						
서울시	시청		와상 사지마비장애인 아동은 기초수급자 차상위 이내			
	중구		제공기관 추천에 의함 국고지원사업과 동일			
	용산구		기초수급자 독거장애인 장애인부부 우선			
	서초구		인정조사표에의해 일정점수이상인자			
	강남구		국고지원사업과 동일			
	송파구		아동 급 및 사지마비 등 최종증장애인			
부산			인점점수에 따라 선정 우선 순위 적용			
대구			급은 독거 및 준독거 위주 급은 지적 발달 장애			
인천			자체적인 별도기준 적용			
광주			최종증장애인			
대전			자체적인 별도기준 적용			
울산			시간씩 일괄 추가 급은 시간 지원			
강원	원주시		성인 등급 및 아동 등급중 선정			
	동해시		인정조사표			
충북	도청		독거 수급자 최저생계비 이내			
	청주시		독거장애인 부부장애인			

충남			자체적인 별도기준 적용			
경남	도청		자체적인 별도기준 적용			
	개시청	각기	자체적인 별도기준 적용			

실제 지자체 추가지원 규모는 위 통계보다 더 높은 수준임  
 장애인구 약 만 천명의 강릉시 년 약 억원 추가예산편성  
 장애인구 약 만 천명의 의정부시 년 약 억원 추가예산편성  
 장애인구 약 만 천명의 평택시 년 약 억 천만원 추가예산편성  
 년 지자체 추가지원 예산 대부분 증액 광주 억원 울산 약 억원 대  
 구 약 억원 전남 억 등

## 대안제시

### 경기도 차원의 활동보조 서비스 시간의 현실화와 실행계획 확립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 서비스는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경기도는 년 중증장애인의 권리라고 인정한 바 있고 국가사업 시행시 나타나 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예산확보를 통하여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약속한바 있다 하지만 형식적인 협의기구를 한차례 여는 것으로 년의 협 상을 부정하고 있다 현재도 여전히 활동보조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중증의 장애인들은 자신들의 상태에 맞는 활동보조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경 기도 차원의 활동보조 서비스 추가시간을 지원해야 한다 그 기준은 장애 정 도에 따라서 하루 시간부터 하루 시간까지 다양할 것이며 이를 실현하기위 한 조사와 실행 계획을 도지사 재임 기간에 어떻게 실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내 놓아야 할 것이다

### 중복되는 활동보조인 서비스의 일원화와 최중증 급 급 장애인 정도에 적합한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경기도는 년부터 자체사업으로 장애인 가정에 파견하는 장애인 생활도 우미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로 가사에 한정하고 있다 현재 활동보조 서 비스는 중증장애인의 일상 활동에 대한 지원으로 가사 목욕 대필 동행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중복되는 장애인 생활도 우미 사업과 활동보조 서비스를 현재의 활동보조인 서비스로 일원화하고 최 중증 장애인을 기준으로 추가적인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급 장애인에게도 가사에 한정된 서비스가 아닌 일상 활동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

를 제공해야 한다 활동보조 서비스는 보편적인 서비스로 누구나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예산으로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여전히 시혜와 동정의 시각으로 차별화 하고자 하는 전제가 깔려 있다 기본권인 생존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것이 도지사의 책무인 것이다

### **독자적인 활동보조 서비스 대책마련과 장애인 자립생활보장을 위한 상시기구 구성**

현재 보건복지부 차원의 활동보조서비스는 예산을 효율성이라는 명목 하에 갖가지 규제와 제한 속에서 활동보조 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공공적 영역에서 사적인 영역으로 넘기려고 하고 있다 활동보조인에 대한 보수교육을 중계기관에 떠넘기고 활동보조 서비스 시간에 대한 이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이용자에 대한 자부담을 배 정도 인상해서 노인 장기요양제도에 근접하게 만들어 놓고 민간에 그 책임을 전가하려 하고 있다 현재 활동보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에게 자부담을 늘이는 것은 재정적 능력이 되던지 아님 가족이 돈을 담보하는 것으로 국가와 지방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국가사업의 미흡한 부분을 보충할 의무가 있으며 활동보조 서비스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상시적인 기구로서 경기도에 장애인 자립생활 보장을 위한 위원회를 두며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각 영역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 아동의제

### □ We Start(위 스타트)마을과 Dream Start(드림 스타트)센터의 통합관리

#### 현황 및 문제점

경기도 위 스타트 마을사업은 만 3세 이하의 저소득층 요보호아동에게 교육 빈곤의 대물림 방지를 모토로 복지 교육 보건 의료서비스의 체계적 제공을 통한 미래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투자 사업으로 출발했다 취약계층 지원강화와 소외계층 아동능력개발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위 스타트 마을사업은 아동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성남시 야탑동 안산시 초지동 군포시 산본동의 3개 마을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2014년도부터 시행되는 아동보호시스템 강화사업이다 이후 2015년도에 수원시 우만 동 등 3개 마을이 추가되고 2016년 안산시 본오 동 외 3개 마을이 더 조성되어 빈곤아동으로 추산되는 약 1,000명의 대상아동을 기준으로 볼 때 1인 약 30여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민선 4기 도정운영계획 그러나 이 사업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인 찾아가는 서비스와 맞춤형 프로그램이 잘 이뤄지기 위한 시범지역의 선정과 아동과 가족에 대한 통합지원과 개입의 서비스 체계가 지역기관들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과의 통합연계 및 네트워크가 중요성으로 부각되고 있음에도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위 스타트 마을 선정 및 조성에 관한 기준과 기존 아동복지사업 진행에 대한 분석 및 명확한 근거 절대빈곤지역 상대빈곤지역 가 미비하며 행정구역 상 해당 마을에서 이사 또는 잦은 이주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례관리의 지속성과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서비스 대상 아동을 위 스타트 마을에서 인근마을까지의 이용 및 거주 허용범위를 넓혀야할 필요가 있다

대상아동 및 가정에 대한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도 영 유아는 가정방문프로그램 간호사 사회복지사 과 초등학생은 방과후 보호 및 기본적인 교육 복지사업에 중점 학교사회복지사 공부방 사회복지사 을 두고 있으나 사례 수 예 개 센터에 약 100여 사례의 밀집도에 대비 교육중재 부모교육 기관연계 정보제공 등의 집중사례관리 역할수행의 한계성이 나타나며 전반적으로 시범사업의 성격으로 사례관리의 양적결과와 회계보고 사업결과보고 위주의 실효성이 미비한 부분이 드러나고 있다 동 위 스타트 마을사업 담당 사회복지사 인터뷰



한편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 및 저소득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보건복지교육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과 공평한 양육여건을 보장하고자 하는 아동보호통합서비스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한국청소년상담원에 위탁을 통해 희망스타트 시범사업을 거쳐 드림스타트센터로 명칭 변경 하여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위 스타트와 드림 스타트 등 유사사업과의 중복성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한 예로 동일한 인력이 드림스타트와 위스타트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각각 소관부처와 예산지원체계가 다른 가운데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및 서비스 매뉴얼과 사업을 시행하고 전달하는 시스템이 중복되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 대안제시

아동에 대한 가정 학교 지역사회연계를 통해 통합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교육청과 학교 아동보호전문기관 영 유아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 및 기관과의 협력 등 연계체계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담당공무원 간호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드림스타트의 수행인력은 통합지원체계의 아동보호통합서비스를 수행하기에 전문성이 현저히 부족하며 지역 내 자원 및 사회복지기관과 시설 연계 등의 서비스 내용이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예산의 낭비와 효율성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보육 교육복지 아동복지 가족복지의 상호 관련성을 고려한 통합적인 원 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을 위한 실천적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 □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대한 질적 제고

### 현황 및 문제점

지역아동센터는       년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과거 민간중심의 빈곤밀집 지역 방임아동보호 학교적응 및 학습부진에 대한 집중적인 보호서비스로 진행해오던 공부방을 전면 흡수하여 지역사회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이용시설의 확대와 보편주의적 아동복지관점에서 아동복지시설로 제도화된 시설이다

현재 경기도는 전국 지역아동센터       여개소 중 가장 많은       여개소가 난립되어 있으며 예산지원의 기준 및 관리인력의 부족 아동복지시설로서의 기능여부 등 다양한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년       개소에서       년       개소

시설설치기준의 문제점으로 거리제한 교회와의 분리를 통한 독립된 아동복지시설로서의 기능수행 문제 시설면적 및 설치기준의 변경문제 영 유아보육시설을 기준으로 할 때보다 아동 인 당 최소       평 이상을 확보해야 하나 현행 기준은       평 이상 와 양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현상에 대한 근거기준 마련과 대책이 미흡하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에 대한 보호 관리 교육 프로그램은 외부지원인력에 과다 의존되어 있어 효율성과 업무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통해 아동에 대한 관리와 보호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 즉 학습도우미 아동복지교사 튜터교사 야간돌봄교사 등 별도 지원체계로서 운영비 및 보조금 외 별도의 인력지원을 함으로써 이중지원과 비효율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또한 결식아동지원사업에 의해 거의 모든 지역아동센터에서 단체급식이 이루어지나

      평 미만인 집단지도실 상담실 급식 주방 실까지 운영되고 있어 환기 악취 위생의 문제로부터 분리되지 못한 실정이며 주 기능이 무료급식소와 같은 부정적 이미지가 표면화 되었다 또한 운영보조금 사업비 과 급식지원비의 별도 지원 및 관리 체계로 예산의 중복성과 효율성의 문제가 지적되기도 하였다 지역아동센터 전수평가

한편 교육복지 찾아가는 방과후 돌보미 저소득층 자녀 학습도우미 사업 방과후 학교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의 프로그램 내용 및 대상의 중복성이 과다경쟁 또는 중복수혜문제와 함께 각 기관 및 시설 간 상호 협력과 공조체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과다경쟁 수혜자가 아닌 수익자 중심의 모델로

전략될 가능성이 우려되며 더불어 수혜자로부터 부정적 이미지와 함께 서비스 쇼핑을 유도할 우려가 있다 한부모가정 자녀 저소득층 자녀 등

### 대안제시

현재 경기도는 전국기준으로 가장 많은 지역아동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시설설치기준의 전용면적과 거리제한 등의 근거가 미흡하여 중복설치 되거나 소규모 종교단체와 운영분리가 되지 않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급속한 양적성장에 준하는 질적 운영효율화를 위한 여타 아동복지연합회와 지역아동센터협의회 등의 통합지원방안을 도 차원에서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의무 규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된 아동은 대개 동사무소와 해당 초등학교와의 긴밀한 협력체계 속에 사례관리 등이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의 운영보조금 수준으로는 상근종사자 생활복지사가 센터 내 아동관리에 급급한 수준이므로 튜터 아동복지교사 등 외부지원인력을 자체적인 자원조직의 형태로 전환하고 운영보조금의 현실화 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행된

년 지역아동센터 전수평가에 대한 결과에 기초하여 취약시설과 부실운영 시설에 대한 통 폐합 조치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 아동양육시설의 기능전환

###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는 전쟁이후 고아와 기아 부랑아 빈곤아동을 중심으로 한 요보호아동의 주거생활의 시설 정책 및 지원이 중심이 되어 매우 낙후한 아동복지모델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전통적 시설입소 아동 전쟁고아 기아 발생의 감소와 더불어 부모의 이혼 사망 가출 및 결손가정 등 가정환경 및 부모의 장애 실직과 빈곤 가정문제를 통한 아동방임 또는 적절히 양육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리보호의 형태로 시설에 입소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의 준수와 이행을 위해서 그간 정부에서는 요보호아동의 가정보호 및 친 가정 우선보호를 강조하고 있으며 차선택으로 국내입양과 가정위탁 보호 공동생활가정 확대 등의 대안 및 아동복지시설의 다기능화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아동복지시설의 대표성을 띄는 아동양육시설은 시설 다기능화와 개방화에 그 역할과 기능이 이르지 못하는 실정이며 오늘날 다양한 사회문제와 가정문제로 파생된 학교사회사업 지역아동보호사업 확대아동보호사업 등 여타 아동복지사업분야와는 별개로 고립되고 정체된 이미지를 고수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내 아동양육시설은 개소 중 아동일시보호소시설 영아시설 육아시설 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경기도아동복지연합회 경기도아동상담실 등이 운영지원을 하고 있다

### 대안제시

아동양육시설은 과거 전후에 설립된 고아원 보육원에서 발달된 생활시설 모델이므로 아동복지시설의 전체성을 대변하기에는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 규정이 필요하며 집단보호 중심의 기능으로부터 부모이혼 가족해체 등의 과정에서 손상된 학교생활 부적응 심리 상담 진로 및 사회적응 등을 돕는 성장과 지원서비스가 요구된다 또한 시설 자체의 인력인 생활지도원의 역할에 대한 재 정의와 훈련을 통해 자립프로그램과 아동의 특기 및 기술교육 등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관리와 감독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장기보호 서비스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침체화 폐쇄화된 기존 양

육시설의 공간 및 인력에 대한 활용을 통해 청소년복지분야 쉼터 및 자립지원 시설 아동상담소 입양 일시보호 등의 기능을 흡수하여 아동복지 종합시설 서비스로 보강할 필요가 있다 예산 인력 시설 등

한편 경기도아동복지연합회의 기능전환 및 아동복지관련 시설 및 기관의 회원통합유도가 필요함 현재 일시보호시설을 포함한 아동양육시설 영아시설 육아시설의 약 70개 기관만을 회원단체로 구성되어 대표성을 고수하고 있으나 동일한 요보호아동에 대한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여타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등의 유관기관과는 별개의 네트워크와 독립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상호 배타적이며 분절적인 아동복지서비스가 유사한 대상과 전달체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 □ 아동복지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활성화

### 현황 및 문제점

경기도는 복지수요가 크고 권역별 지역의 편차가 큰 특성을 바탕으로 영유아보육사업 시설보호사업 지역아동보호사업 입양사업 가정위탁사업 일부 학교사회사업 및 청소년복지서비스 영역과 중첩되는 다양한 아동복지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도시지역 농촌지역 도 농 복합지역 등 다양한 지역적 특성과 복지수요에 대한 전달체계 및 복지환경의 여건이 불안정한 실정이다

최근 사회복지정책과 지역사회복지계획 평가 등에서 언급되고 있는 양적 성장에 치우치는 편향성 전달체계상의 문제 취약계층 중심의 서비스 중복성 문제 등이 그것이다

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지역아동센터의 제도화 과정에서 경기도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아동센터가 활성화 되고 있다 또한 무한돌봄사업 및 위기가정지원 위스타트마을 등 다양한 아동복지사업 및 가족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업은 모두 지역 내의 모든 아동의 권리를 신장하고 아동이 안정적으로 보호받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과 전문화 활성화라는 공통의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방과후 보호 및 학습지원을 학령기 초교 아동 중심으로 청소년까지 실시되며 빈곤아동과 방임아동 방과후 일과나 정서 학습지원 활동을 통하여 학교 지역사회 가정이 협력하여 진행되는 주요한 아동복지사업이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는 급속한 양적 성장으로 인해 여타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인 종합사회복지 아동복지시설연합회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여성 가정복지 분야의 기관과는 별개로 경기도지역아동센터연합회 등을 중심으로 독립된 네트워크와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해 가고 있다 이러한 분절성은 지역 내의 모든 아동의 권리를 신장하고 아동이 안정적으로 보호받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걸림돌이 되며 아동복지사업의 전문화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지역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노인 장애인 등 이용대상에 대한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단종복지관이 활성화되어있으나 아동복지 분야에서는 아동복지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아동양육시설 내에 설치됨 이 유명무실하게 그 기능과 역할이 규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대안제시

기존 지역아동센터협의회 아동복지연합회 등의 기존 민간조직을 활용하여 보육정보센터에 준하는 아동복지 종합지원센터의 조직과 설립을 통해 아동복지 분야별 사무국과 조직구성을 통한 협력과 사례관리 연계 정보교류 등을 이행해 나갈 것을 제의하는 바이다 이러한 거점센터의 설립 및 조직을 통해 기본적인 아동복지사업의 실천과 기술을 공유하고 통합적인 정보시스템의 구성과 활용을 높이는 한편 종사자의 전문성신장을 위한 업무협력체계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내 아동복지 서비스의 중복과 질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가칭 아동복지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을 통해 현재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상담소 등 이용시설의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아동양육시설 입양기관 가정위탁기관 단기보호시설 등의 대리적 서비스의 패러다임 전환을 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아동복지 서비스가 지향하고자 하는 학교 가정 지역사회 및 도정 차원의 관심과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시범적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과 자원의 공유가 이루어짐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실효적인 아동복지사업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6.2 지방선거 경기도사회복지대책위원회 명단

기 관 명	성 명	전화번호	비 고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김원영	213-8551	공동대표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김중자	252-7554	공동대표
경기복지시민연대	이인재	215-4399	공동대표
경기도노인복지시설연합회	이은경	222-6097	
경기도보육시설연합회	진용복	243-1486	
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	최길수	557-4488	
경기도노숙인시설연합회	정충일	745-9356	
경기도아동복지협회	심양금	252-3060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정 권	256-6073	
경기도청소년상담센터협의회	이춘화	372-4004	
한국정신장애인사회복지시설협회 경기지부	안영선	373-1900	
한국지역자활센터 경기지부	우정석	232-0175	



## 6.2 지방선거 경기도사회복지대책위원회 실무위원 명단

기 관 명	직 위	성 명	비 고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	김종태	위원장
경기도노인복지시설연합회	사무국장	방정문	
경기도보육시설연합회	사무국장	천영미	
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	사무국장	이상희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사무국장	유재상	
경기도노숙인시설연합회		안승영	前 회장
경기도아동복지협회	사무국장	한경희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사무처장	정은주	
경기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협의회	팀 장	임현철	
경기복지시민연대	사무국장	선지영	
한국정신장애인사회복지시설협회 경기지부	회 장	안영선	
한국지역자활센터 경기지부	사무국장	유유미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부 장	박일규	간사

6.2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 **사회복지정책 제안집**

---

---

발행일 2010. 5.

발행처 6.2 경기도사회복지대책위원회

---

---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79-5

전화 (031) 213-8551 / 팩스 031-213-8557

E-Mail ggcsw@hanmail.net